

韓·日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1995. 9.

金 永 椿 (국제연구실 연구위원)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

序 文

일본은 냉전이후 미·일간의 世界的 同伴者關係를 구축함으로써 아·태지역에서 역할중대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 한반도 영향력 확대 차원에서 대북한 수교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최근 일본의 국내정치의 대변혁과 新保守化 경향은 이러한 움직임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민족통일연구원 국제연구실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과 이에 따른 한·일관계 변화가능성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본 연구를 추진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한·일간의 主要懸案 및 變化要因의 초점을 맞추어 한·일관계를 分析·展望하였다.

본 연구가 동북아 국제환경 및 한·일관계 변화와 관련하여 한국의 안보와 통일정책 입안에 기여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1995. 9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

要 約

최근 일본은 냉전체제의 붕괴 및 미·일간의 세계적 同伴者 關係 구축을 계기로 역할 증대를 모색하고 있으며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의 일환으로 對北韓 修交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국제적 역할 증대와 대북한 수교정책은 韓·日關係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일간의 主要懸案을 분석하고, 양국관계의 변화촉진 요인과 지속요인을 도출하는 동시에, 향후 한·일관계를 전망함으로써 한국의 안보와 對日관계를 강화하고 유리한 통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응책을 제시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1. 韓·日關係의 概要

일본의 대한반도정책은 미국의 동북아정책 및 한반도정책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전후 냉전시기 미국의 동북아정책 기조는 한·미 및 미·일간 안보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었고, 미국은 베트남전쟁을 계기로 동북아시아의 戰略的 安定을 위하여 한·일 관계정상화를 仲裁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은 미국의 정책에 부응하여 한국과 외교관계를 정상화(1965)하였고, 한국을 경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한국과의 정치·경제적 紐帶를 강화하는 한국 일변도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자국의 중·장기적인 정치·안보 및 경제적 이익차원에서 한반도 전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가 필

요하다는 점에서 대북한 관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닉슨독트린 이후 동북아의 데탕트분위기 및 남북한간의 화해 분위기하에서 자주적인 외교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는 판단에 따라 북한과의 무역협정을 체결(1972)하는 등 대북한 관계개선을 통해 南北韓 等距離外交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그후 新冷戰시기 일본은 미국의 동맹정책에 따른 한·미·일 안보유대 강화 압력을 받음으로써 남북한 등거리외교를 당분간 자제하지 않으면 안되었으나, 최근 탈냉전추세와 함께 대북한 관계개선을 재차 적극 모색하고 있다.

2. 韓·日間の 主要懸案 및 變化 促進要因

최근 한·일관계의 懸案은 크게 외교안보현안과 경제현안, 그리고 과거청산문제가 있다. 외교안보현안은 동북아 안보와 한반도 안정유지, 한·일 군사협력 확대강화, 다자기구를 통한 지역안정모색과 북·일수교문제, 그리고 일본의 유엔상임이사국 진출문제 등이다. 경제현안은 무역역조 및 산업기술 移轉문제이다.

한·일 양국은 불안정한 過渡期的 域內秩序와 미국세력의 퇴조에 대비한 새롭고 안정적인 동북아 질서형성에 대비한 한·일 공동대응 보다는 한·일간의 군사협력교류 및 다자간 안보협력관계 구축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한국국방장관 방일(1994.4), 공중우발 충돌방지협약, 고위 한·일 실무회담

(1994. 11) 등 한·일 군사교류가 확대되고 있다.

일본은 다자간 대화를 성사시켜서 일본 자신이 군사대국화하고 있다는 아시아국가들의 우려를 稀釋시키는 동시에 자국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고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다자간 안보대화 개설의도는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유도하고 아·태지역 협력에 同參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다자간 안보협력체에 대한 한·일간 입장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北·日修交 懸案을 살펴본다면, 일본은 국제질서 및 동북아질서 변화, 미·일간의 세계적 동반자관계 구축에 따른 일본의 역할증대, 북한의 대일접근을 계기로 한반도에서 독자적인 영향력 확보를 위하여 북한과의 수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입장은 일본의 대북 수교협상이 남북대화 재개와 連繫되어 한반도안정 및 통일환경에 기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최근 일본정부는 유엔 안보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한국의 협력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한국은 거부권을 갖지 않는 제3의 상임이사국 그룹을 신설하는 방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한·일간의 經濟懸案은 무역역조 및 산업기술 이전문제이다.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29년동안 대일무역적자 총액은 약 850억 달러에 이르며, 이는 한국의 무역적자 총액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의 경제구조가 개방되어 있지 않고 閉鎖적이기 때문에 대일 수출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첨단제품의 수출을 위한 기술이전을 기피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일본측은 무역불균형이 양국간 산업구조의 차이에서

파생된 것이며,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자본재와 부품으로 수출증가를 이루었으므로 대일 무역불균형은 한국경제의 障礙要因이 아니라 寄與要因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한·일관계의 변화촉진요인으로는 현안의 북·일수교 이외에도 일본의 국제적 역할 증대정책의 일환인 美·日關係 再調整, 군사현대화 및 해외파병정책 그리고 일본정치의 新保守主義化 등을 들 수 있으며, 관계지속요인으로는 미국의 균형자 역할, 한·미 관계유지, 그리고 한·일 경제협력 및 교류확대 등을 들 수 있다.

3. 韓·日關係 展望

한·일간의 主要懸案을 외교안보와 경제분야로 나누어서 한·일 관계를 전망해 본다. 외교안보분야의 첫번째 현안은 한·일 양자간의 군사협력교류와 다자주의를 통한 지역안정 모색이다. 한·일 양국간 안보협력은 상호신뢰 조성을 위한 안보대화, 정보교류, 합동군사훈련 등을 통해 活性化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이 안보교류를 활성화한다고 하여도 일본은 防衛物資를 수출할 수 없는 헌법상의 제약을 인식하고 그 범위내에서 협력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한·일의 실질적인 군사협력은 2000년까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자간 안보협력문제와 관련, 현재 域內에 존재하는 전략적 비대칭성과 이익의 다양성을 감안할 때, 2000년 이내에 「아시아

안보협력회의」(CSCA)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가 결성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은 동북아 정세를 流動的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동북아 질서를 위한 다자간 안보협력에 대한 논의를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일 양국의 논의는 신뢰구축, 정보교환 차원에서 바람직한 관계발전에 寄與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안보분야의 두번째 현안인 북·일수교의 전망은 다음과 같다. 현재 북·일 양국은 국교재개 교섭회담도 실질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식민지시대의 보상문제, 과거사문제, 그리고 「이은혜」문제 등 양국간 懸案들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일수교는 북·미수교와도 연계되어 있어서 일본은 미국의 입장을 살피지 않을 수 없고 한국의 입장도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독자적 수교교섭에 제한이 있다. 따라서 북·일 국교수립은 최소한 향후 1년 이상의 세월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안보분야의 세번째 현안은 일본의 유엔안보리 常任理事國 진출문제이다. 일본이 2000년까지 유엔 상임이사국에 진출할 가능성은 유엔평화유지군에 대한 헌법 개정문제, 안보리 개편문제에 대한 5대 이사국 입장의 불일치 등 국내외적 요인을 감안할 때, 稀薄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한·일 양국이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문제로 크게 갈등상황에 빠지거나 불편한 관계를 맞이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편 한국의 기술이전통로가 일본 일변도에서 미국 등으로 多邊化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한·일간 경제교류도 1965년 2억4천만달러에서 1994년에는 백배가 넘게 성장하고 있는 바,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에도 불구하고 한·일 경제관계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향후 한·일관계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변수도 존재하고 있는 바, 북·일수교, 일본의 군사현대화정책, 그리고 신보수주의자들의 등장 등이 그것이다. 특히 최근 일본정계는 총보수화현상이 확산되면서 사회당의 무라야마 총리, 신진당의 오자와 간사장, 그리고 자민당의 하시모토 총재 등 신보수주의자들의 세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들은 일본을 아태지역의 정치·군사강대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역내 국가들과의 군사교류를 확대하는 동시에, 미·일 안전보장체제를 아시아 각국으로 확장시켜 다자간 안보협력을 구축한다는 구상을 강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향후 한·일관계는 미·일관계속에서 일본의 역할증대, 일본의 군사강국화, 북·일수교, 신보수주의 등장 등 갈등요인 때문에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지만 국교단절 등 심각한 위기상황으로까지 발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한·일관계는 급속한 변화없이 持續·維持될 것으로 전망된다.

4. 韓國의 對應方案

동북아 및 한반도정세 안정을 위해서는 한·일 군사협력·교류가 긴요한 바, 단기적 차원에서 한국은 다음과 같은 대일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와 미래의 북한 핵활동을凍結시키기 위한 한·미·일 共助體制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

다. 둘째, 북한 노동 1호 미사일의 사정권내에 한국과 일본 관동지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한·일 양국은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대응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수출금지협약(MTCR)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스커드, 노동 1·2호 미사일의 수출금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일 양국은 군비통제차원에서 군사적 신뢰구축을 이룩하고, 세계평화와 지역안정을 위한 공동관심사에 대한 협력체제를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자주의를 통한 지역안정을 모색해 나가기 위한 중·장기적 대응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연합의 단계에 도달하기 이전에 현행 휴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轉換이 필요한 바, 다자간 안보대화의 채널속에서 북한의 일본 및 미국과의 관계개선 속도와 평화체제의 전환문제를 連繫시키는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한·일 양국은 공동협조하에 다자간 안보대화의 북한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되, 북한의 참여에 대비하여 남북양자간에 다룰 수 있는 문제와 다자간 틀 속에서 협의할 문제를 구분하는 등 철저한 事前準備가 필요하다. 셋째, 다자간 안보대화를 mini-CSCE형의 안보협력체 수준으로 발전시키려면 군비통제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인 바, 미국은 물론 러시아, 중국 및 일본의 핵정책이나 미사일 수출정책, 각국의 在來式 무기수출정책, 그리고 전략무기 체계개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일·북한수교 이전에는 단기적 대응방안으로 일본과의

긴밀한 협의와 협력을 통해 일본의 대북접근을 남북대화재개와 連繫시켜 수교교섭의 완급을 조절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장기적 대응책으로 정치·안보면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수교후 예상되는 일본의 대북한 경제지원에 대비하여 한국은 일본과 긴밀한 협의 및 한·미·일 협조체제를 통해 일본의 원조가 북한의 개혁·개방을 誘導하고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둘째, 일·북한수교 후의 일·북한 경제협력에 대해 과민하게 경계하기 보다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한국의 정치·경제적 實利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일·북한의 경제협력을 이용하는 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일·북한수교 후의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역할 증대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일·중·러 3국 간의 牽制와 均衡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조치를 강구·추진한다.

일본의 유엔상임이사국 진출과 관련, 최근 미국은 세계적 同伴者關係 구축에 따른 역할분담 차원에서 일본과의 물품·수송지원협정을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적용하는 등 일본의 유엔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유엔상임이사국 地位 획득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일본이 유엔상임이사국에 진출하되 拒否權을 갖지 않는 상임이사국 지위를 갖도록 하는데 외교력을 집중시켜야 한다.

경제현안인 대일 무역역조문제와 관련, 최근 일본이 엔고, 무역흑자의 감축을 위해 대폭적인 産業構造調整 계획을 입안하고

있는 바, 한국 정부나 기업은 우선 일본기업들의 한국 유치를 적극화하고, 일본 기업들의 對韓진출이 용이할 수 있도록 자금 조달, 세제 등 여건을 재정비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한국 기업의 대일본진출이나 제3국에서 공동협력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산업기술 이전과 관련, 한국의 대기업들은 호경기를 이유로 필요한 설비나 자재를 수입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업들간의 기술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전략적인 기술제휴, 외국기술자의 招聘에 의한 국산화의 추진 등 대일본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일 양국간 경제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양국이 분야별로 서로의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상호특화된 水平分業을 실현하여야 한다. 이러한 수평분업하에서만 산업공동화를 막을 수 있다. 둘째, 相互補完을 바탕으로 한·일 양국간 공조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한·일 양국은 이러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으로 대표되는 경제블럭화 현상에 대응하여야 한다.

한편 다자주의를 통한 지역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근 진행되고 있는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이 동해를 중심으로 한 경제권 활성화를 제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한국은 역내 각국과의 경제협력이 환황해권과 환동해권의 발전을 균형있게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아태경제협력체(APEC)와 관련하여 한국은 한국이 역내 경제협력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

당할 수 있도록 미·일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아·태지역의 무역자유화가 이루어져 지역의 배타적 경제권이 형성되지 않도록 필요한 정책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은 아·태지역 차원의 廣域的 지역협력과 동북아지역 차원의 小地域的 경제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폐쇄적 형태가 아닌 開放的 地域主義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선도하여야 할 것이다.

- 目 次 -

第I章 序 論	1
第II章 冷戰時代 韓·日關係 變化過程	3
1. 戰後 冷戰時代(1945~1969): 韓·美, 美·日 安保 協力關係	3
2. 데탕트時代(1969~1979): 日本의 對北接近 試圖	5
3. 新冷戰體制(1979~1980年代 중반): 韓·美·日 安保協力 強化 . 6	
第III章 韓·日間 主要懸案	9
1. 外交安保分野	9
가. 東北亞·韓半島 安定維持	9
나. 北·日修交	14
다. 유엔常任理事國 地位追求	18
2. 經濟分野	21
가. 貿易逆潮	21
나. 産業技術移轉問題	22
3. 過去清算問題	23
第IV章 韓·日關係 變化要因과 展望	27
1. 變化促進要因	27
가. 美·日關係 再調整	27
나. 軍事現代化 및 海外派兵政策	33

다. 韓半島 影響力 擴大摸索	37
라. 日本의 新保守主義 強化	38
2. 持續要因	40
가. 東北亞에서의 美國의 均衡者 役割	40
나. 韓·美關係 維持	41
다. 韓·日 經濟協力 및 交流擴大	41
3. 展望	41
第V章 韓國의 對應方案	47
1. 基本方向	47
2. 短期的 對應策	49
가. 外交安保懸案	49
나. 經濟懸案	53
다. 過去清算問題	54
3. 中·長期的 對應策	56
가. 安保協力：東北亞·韓半島 安定維持	56
나. 經濟協力	59
參考文獻	62

第I章 序 論

동북아에서 가장 발전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享有하고 있는 日本은 역내는 물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여 왔다.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일본의 對韓政策이 어떠한 내용과 방법으로 집행되는가는 미국의 동북아 및 한반도정책, 남북한관계, 그리고 일본 국내정치의 變數에 의하여 결정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일본은 냉전체제 붕괴 및 미·일간 세계적 同伴者關係 구축을 계기로 국제적 역할중대를 모색하고 있으며, 하나의 「보통국가」로서 종전보다는 더 독자적이고 능동적인 외교정책을 추구해 왔다. 특히 걸프전에서 130억 달러나 되는 전쟁비용을 다국적군에 제공하고도 피를 흘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유진영에서 푸대접만 받은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일본은 경제대국에만 안주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강력한 경제력을 가진 일본은 이 경제력을 정치 및 안보영향력으로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企圖는 미국과의 「세계적 동반자관계」구축, 유엔상임이사국 진출모색, 그리고 군사력 현대화정책 등으로 表出되고 있다.

과거사와 반공을 주축으로 한 한·일관계의 特殊性은 그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냉전의 종식과 자민당의 붕괴로 戰前세대에서 戰後세대로의 정치주역 교체는 한·일관계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앞으로의 한·일관계를 주도할 새로운 주역은 과거 제국주의의 잔재를 의식하기보다는 일본의 경제부흥과 발전에 긍지를 느끼는 세대이다. 그들은 신보수주의적 사고를 가졌으며, 경제력

에 걸맞는 국제적 역할증대를 추구하고,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일본의 건설, 즉 21세기의 국제적 선두주자로서 일본의 地位를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한·일관계의 내용과 방법도 전반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시각이 논의되어진다. 첫번째 견해는 반공이라는 共同利益이 없어져 한·일 양국간의 민족주의적 갈등을 조정 내지는 완화시키기 힘들다는 것이다. 두 번째 시각에 의하면 한·일 양국은 안보이익 이외에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냉전이후에도 양국관계가 관리하지 못할 정도로 악화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는 반공시각이나 경제 등 이해관계에 논점을 맞추고 있으나, 이외에도 동북아 및 한반도 안정이라는 공동이해를 바탕으로 한 한·일관계는 한·미·일 관계 속에서 관리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2장에서 냉전시대 한·일관계 변화과정을 3단계로 살펴 보았으며, 3장에서는 한·일관계 主要懸案을 외교·안보와 경제분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고, 4장에서는 한·일관계를 전망하기 위하여 변화 촉진요인과 지속요인을 도출하여 사안별로 分析·展望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5장은 한·일관계 변화전망을 토대로 한국의 대응방안을 기본방향, 주요현안별 단기적 대응책, 그리고 중·장기적 대응책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여기서 단기적 대응책은 현재의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이며, 중·장기적 대응책은 대략 2000년까지의 상황을 前提로 한 방안이다.

第II章 冷戰時代 韓·日關係 變化과정

1. 戰後 冷戰時代(1945~1969): 韓·美, 美·日 安保協力관계

냉전시기 일본의 대한반도정책은 미국의 동북아 정책의 범주 내에서 전개되어 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소냉전이 심화되자 미국은 西方陣營의 지도국으로서 서방진영을 결속시켜 소련에 대항하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일본을 「반공의 장벽」으로 만들기 위하여 일본에 대한 점령정책을 일본경제부흥정책으로 전환하였다. 미국은 일본을 미국의 방위체제 및 군사전략 하에 編入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한국전쟁을 契機로 한·일간에 미국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군사·안보적 협력관계가 형성되었다.

한·일간 간접적인 군사·안보적 협력관계와 관련된 합의는 1960년 미·일 안보조약의 「극동조약」에 명시되어 있다. 미·일 안보조약 제6조는 “일본의 안전에 기여하고 극동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공군 및 해군이 일본에 있는 시설 및 구역을 사용할 수 있다”¹⁾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극동조항」이 상정하고 있는 극동 유사시의 지리적 및 전략적 범위에 한반도가 포함되어 있다.

1960년대에 들어와서 한·일교섭은 활발한 양상을 나타냈는데 이것은 미국의 관심이 아시아에서 크게 증대하였고, 한·미·일 3국의 이해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국제정세적 측면에서 볼 때 중

1) 「朝日新聞」, 1960. 6. 23.

국이 1964년 10월 핵실험에 성공함으로써 아시아에서 팽창세력으로浮刻되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중국의 핵실험으로 정치적(위협세력), 그리고 심리적(핵알레르기 반응)으로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자민당 내에서는 1964년 기시(岸), 사또(佐藤), 이시이(石井) 등이 주도하여 아시아연구소를 설립하였는데 이는 일본의 안보노선은 중국의 팽창을牽制하고 한국, 자유중국, 그리고 미국과 긴밀한 紐帶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경제적 측면에서 1960년 초에는 이미 서구와 일본의 대외준비고는 미국과 맞먹는 것이 되었고, 반면에 미국의 金보유고는 1948년의 244억 달러에서 1959년 말에는 195억 달러로 감소하여 미국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였으며, 소위 Triffin Dilemma에 놓이게 되었다.²⁾ 일본의 경우 이케다(池田) 수상외의 국민소득 倍增政策에 의한 과잉투자과 구조적 불황으로 인하여 아시아의 시장이 요구되었다.

한국은 60년도에 사상 처음으로 미국원조가 2억 달러를 넘지 못하고 감소하자 경제발전을 위해 대일 청구권자금과 일본자본의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60년도의 상황적 변화에 의하여 한·일 회담은 한·미·일 3국의 이해가 일치되었기 때문에 수교결과를 導出하였다.³⁾

2) Robert Triffin, *Gold and Dollar Crisis: The Future of Convertibility* (New Haven, Conn.: Yale University Press, 1961) pp.3~14. 만약에 미국이 국제수지 균형을 엄격히 유지할 경우 세계금융준비의 원천인 달러가 고갈되어, 유동성의 부족으로 국제거래가 침체될 것이고, 그렇다고 미국이 국제수지적자정책을 계속 시행할 경우 미국의 금채고량을 초과하는 달러의 해외과잉보호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금과 달러의 위기를 동시에 몰고 온다는 것이 Triffin Dilemma이다.

3) 김영춘, "수교협정이후의 한·일관계", 『국제정세』, 1990.7. p. 80.

일본은 한·일 국교수립(1965.6.22) 이후 정치·안보·경제적인 면에서 한국과의 유대를 堅持하는 韓國一邊倒政策을 취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입장을 반영하여 1969년 11월 22일 「닉슨-사토 공동성명」 제4항에서 미·일 양국은 “한국의 안전은 일본의 안전에 긴요하다”는 소위 「한국조항」에 합의하였다.⁴⁾

북한은 한·미·일 3각군사동맹이 형성되었다고 보고 일본에 대하여 적대적인 자세를 堅持하였으며, 일본도 한국일변도정책에 따라 북한을 인정하지 않는 정책을 취하였다.

2. 데탕트時代(1969~1979): 日本의 對北接近 試圖

미국은 1969년 닉슨 독트린을 선언하였는데 이는 미국이 중·일과 連繫하여 소련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 있다.

미국이 아시아로부터 역할감축을 公式化하고 한국 및 일본에 대한 방위공약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킴으로써 일본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안정 및 자국의 안보를 위하여 독자적인 이니셔티브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더욱이 미·중 화해로 동북아에 데탕트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일본은 보다 자주적인 외교를 추진할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되었다.

한·일 정상화이후 韓國重視政策을 펴왔던 일본의 외교정책은 1970년대에 진입하면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1972년 1월에 열렸던 닉슨-사토 회담에서 한국문제에 관한 언급이 없었던 것이다. 사토는 기자회견에서 “한국조항은 사실상 소멸된 것이나 다름없

4) 日本外務省編, 「外交青書: わが外交の近況」, 1969年판, p. 400.

고 당시의 해석을 固定的으로 생각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으며, 사태인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⁵⁾ 이러한 맥락에서 1971년 11월 日朝議員聯盟이 결성되었고, 중·참의원 약 240명이 가입하였다. 그 이듬해에는 구노주지(久野忠治)가 일조의원 13명을 이끌고 북한을 방문하여 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1975년 「포드·미키 공동선언」에서는 「한국조항」의 한국을 「한반도」로 대체하려는 일본의 입장이 수용되어 “한국의 안전이 한반도의 평화유지에 긴요하며 또한 한반도의 평화유지는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안전에 중요하다”고 하는 「신한국조항」으로 代替되었다.⁶⁾

그러면 왜 일본은 1950~60년대 한국일변도정책에서 남·북한 외교를 펴고 있는가. 첫째는 1971년 닉슨의 방중과 이에 따른 미·중 관계 개선, 즉 동북아 데탕트체제가 도입되면서 한국안보는 곧 일본안보와 직결된다는 인식이 변화했기 때문이며, 둘째는 7·4 공동성명에서 한국정부가 북한정부를 사실상의 정부로 인정하자 일본은 政經分離政策을 들고 나와 비정치분야에서 북한과 관계를 맺으면서 남·북한 외교를 추구했다고 보여진다.

3. 新冷戰體制(1979~1980年代 중반) : 韓·美·日 安保協力 강화

1980년대에 들어오자 노신영 외무장관은 한·일 외상회의(1981년 8월)에서 안전보장문제와 경제협력문제를 결부시켜 제5차 경제사회개발계획(82~87)을 위해 60억 달러의 정부차관을 일본에 요청

5) 「朝日新聞」, 1972. 1. 8.

6) 이러한 「신한국조항」은 한반도에 있어서도 데탕트구조가 실현가능하다고 하는 명분하에 「한국의 안전」, 「한반도의 안전」 등으로 구분하여 「두개의 한국정책」을 취하기 위한 일본의 준비작업의 일환이었다.

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경제협력이 방위비에 大體될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양측은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였다.

왜 한국은 일본의 경제협력을 요청하였는가. 중요한 배경은 80년대 동북아 기류가 신냉전체제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소련은 80년대에 들어서자 국방비의 지출을 증가(약 15%) 시켰는데, 이 증가가 극동아시아에 상당부분 집중되었다. 반면에 미국은 베트남 신드롬 때문에 아시아에서 세력이 약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련군의 작전해역이 동해까지 확대되자 한국은 한국의 안보가 일본방위에 直結된다는 논리로 경제협력을 요청했다고 볼 수 있다.

신냉전시기 일본정부는 한·미·일 안보유대 강화에 따른 미국의 역할분담 요청에 부응하여 미국의 정치·경제적 헤게모니를 지원하기 위해 재정후원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일본은 「총합안전보장원칙」에 의거 외국원조계획(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 및 주변국에서 안보이익과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을 중요한 원조대상국으로 인식하였으며, 나카소네 수상의 공식 방한(1983.1.11~12)시 40억 달러의 안보경제자금을 제공하였다.⁷⁾

한·미·일 안보유대 강화의 一環으로 한국군, 일본자위대, 주일·주한미군의 무기 및 장비가 급속히 증강되었으며, 일본은 소련의 위협증대에 對處하기 위하여 1970년대 專守防衛戰略으로부터

7) 한영구, “한국 대일 외교의 방향과 과제”, 『국제정세』, 2월 5호(1990년 5월), pp. 60~65.

1,000해리 해상수송로 방위를 위한 적극적인 地域防衛戰略으로 전환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은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新냉전 추세에 따라 대북한 접근을 자제하고 한국과의 안보 및 경제유대를 강화하였다. 신냉전시대 일본은 동맹국과의 안보유대를 강조하는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에 부응하여 對北韓 접근정책 보다 한국안보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한국과의 우호협력관계를 유지·증진하고, 북한과는 경제, 문화 등의 교류를 서서히 증대해 나가는 것이 적당하다”⁸⁾고 밝힘으로써 국제 및 한반도 상황이 호전되면 다시 대북접근정책을 추진해 나갈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8) 日本外務省, 『外交青書:わが外交の近況』, 1981년판, p. 18.

第三章 韓·日間 主要懸案

최근 한·일관계의懸案은 크게 외교안보현안과 경제현안, 그리고 과거청산문제가 있다. 외교안보현안은 동북아안보와 한반도 안정유지, 한·일 군사협력 교류의 점진적 확대·강화, 다자기구를 통한 지역안정 모색과 북·일수교 문제, 그리고 일본의 유엔상임이사국 진출 등이다. 경제현안은 무역역조 및 산업기술 이전문제이다.

1. 外交安保安分野

가. 東北亞·韓半島 安定維持

한·일 양국은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가 냉전이후시대를 맞이하여 냉전시대에 비하여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바,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소 양극체제로 대표되는 냉전구조가 붕괴되었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양향력이 감소되었으며, 소련을 繼承한 러시아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의 체제전환을 통하여 경제발전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의 서방경제권 編入은 역내의 데탕트 추세를 확산시키는 契機가 되었다.

둘째, 냉전구조하에서는 한·미·일의 남방3각체제와 소련·중국·북한의 북방3각체제가 서로 대립하고 있었으나, 북방3각체제가 와해됨으로써 미·일·중·러 4강이 화해와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相互牽制

하는 4강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한반도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은 공동인식을 보이고 있는 바, 이는 북한 핵개발의혹과 노동1호 미사일개발이 극동지역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한·일 양국은 역내정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최근 중국의 군사력증강 및 남사군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강화 그리고 러시아 극동 군사력의 근대화가 추진되고 있다면서 중·러의 움직임에 주시하며 憂慮하고 있다.

한국은 최근 러·북 군사조약이 廢棄됨으로써 러시아를 위협세력으로 看做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남사군도를 둘러싼 중국·베트남·필리핀제국의 분쟁이 가열됨으로써 이에 대비하여 독자적인 해상 교통로 保有를 고려하고 있다.⁹⁾ 또한 한국은 일본이 미국과의 동반자관계를 구축하여, PKO파병 등 안보적 역할을 확대하고 군사력 현대화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 이러한 역할증대 노력이 북·일수교를 계기로 南北韓 等距離外交 등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1) 韓·日 軍事協力 交流의 漸進的 擴大·強化

前述한 바와 같이 한·일 양국은 불안정한 過渡期的 域內秩序와 미국세력의 퇴조에 대비한 새롭고 안정적인 동북아 질서형성을 위하여 한·일 공동대응이라기 보다는 신뢰구축이란 이유에서 한·일간의 군사교류 및 다자간 안보협력관계 構築의 필요성을 實感

9) 오는 2000년부터 해상교통로 방위를 위한 한국해군의 주작전지역이 남중국해(말라카해협-대만-남해안)까지 확대된다. 「中央日報」, 1995. 9. 18.

하고 있다.

최근 한국국방장관 방일(1994.4), 공중 우발충돌 방지협약, 고위 한·일 실무회담(1994.11) 등 한·일 군사교류가 확대되고 있다.¹⁰⁾

同 관계설정은 1) 기존의 한·미·일 3각 협조체제의 주축인 미국이 중심이 되어 愍愍하고 있으며, 2) 해상수송로의 안전확보라는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 보호, 3) 경비절감을 위한 양국간의 정보교환 가능(방공식별권¹¹⁾ 또는 주변강국 정보교환), 4) 미국의 영향력 감퇴시 주변 3강중 신뢰구축이 가장 가능한 국가는 일본이라는 점 등에서 큰 가치를 지닐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同관계 설정은 1) 양국의 외부위협 인식의 차이(한국: 북한, 일본: 러시아), 2) 양국의 국민감정, 제도적 제한 등 국내적 요소로부터 오는 제한, 3) 군사부문에서까지 일본에의 의존 가능성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

(2) 多者主義를 통한 地域安定 摸索

최근 한국과 일본은 탈냉전이후 지속되고 있는 不透明한 동북아정세에 대비하여 동북아지역 및 한반도안정을 위하여 다자간 안보협력체구성에 대한 추진의사를 表明하고 있다.

일본은 1990년까지만 海도 域內 다자간 안보협력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一貫해 왔다. 또한 일본은 영토 분쟁과 같은

10) 「世界日報」, 1994. 12. 21.; 김태지 주일대사는 9월 29일 일본방위청사에서 에토(衛藤)방위청장관과 만나 양국간의 공식적인 군사교류를 증대하기로 합의하였다. 「世界日報」, 1995. 9. 20.

11) 한·일 군용기가 양국의 방공식별구역 인접상공을 비행할 때 상대방 레이더 관계부서에 이를 사전 통보하는 핫라인의 개설에 합의하였다. 「東亞日報」, 1995. 7. 19.

양자간의 문제가 다자간 대화의 틀로는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 미국 측이 보여준 다자간 협상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역시 일본을 소극적으로 만든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1991년 7월 나카야마 타로 일본외상이 ASEAN-PMC에서 「나카야마 제안」을 발표하면서 일본은 多者間 安保協力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했다. 또한 미야자와 기이치 일본수상은 1992년 7월 2일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아·태지역의 신뢰구축을 위하여 ASEAN-PMC 등 기존의 제도를 활용하여 多者間安保協력을 긴밀히 하면서 장래 중국 및 러시아를 포함하는 지역내 안전보장을 위한 정치적 대화의 틀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일본은 지역안보문제에 있어서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공식 안보협력체가 發足할 경우 자국의 역할 및 활동확대에 긍정적인 기회를 부여할 것으로 믿고 있으며 「미야자와 독트린」을 통해 이러한 ASEAN-PMC중심의 움직임에 적극 同調하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 일본이 다자간 안보에 적극성을 띠게 된 이유는 냉전종식으로 역내안보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미·일 안보관계가 영구히 지속될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장차 아시아에서 철수하거나 중국이 군사적인 대국으로 성장할 가능성, 그리고 북한의 핵 위협이나 역내 군비경쟁에 따른 突發事態 방지 등을 위해 다자간 안보대화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이에 적극 同參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¹²⁾

12) 1990년대에 들어선 후 일본국내에서 행해진 다자간 안보협력논의는

유럽에서의 안보협력회의(CSCE)의 완성은 아시아지역에서도 同기구와 유사한 성격의 다자간 협의체의 출현이 가능하다는 기대감을 高潮시키고 있다. 한편 러시아의 경우에도 동구상에 적극적으로, 옐친대통령은 방한시 同구상을 피력한 바 있다.

또한 일본은 다자간 대화를 성사시켜서 일본자신이 군사대국화하고 있다는 기타 아시아국가들의 우려를 稀釋시키는 동시에 자국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고시키려 하고 있다. 일본은 최근까지 아시아 지역안보를 위해 二元的 接近(two-track approach)을 시도하여 왔다.¹³⁾ 즉, 한반도나 캄보디아, 남중국해 등 국지적 지역 분쟁과 관련해서는 관련당사국들의 문제해결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ASEAN에 중점을 둔 광역적인 안보대화를 추진하는 방법이다. 일본이 ASEAN-PMC를 통한 안보대화에 적극적인 이유는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안보협력을 통해 자국의 國際的 役割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 아태지역의 안정적 안보와 관련, 한승주 외무장관은 1993년 5월 31일 분쟁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廣域次元의 안보협력체 구성보다는 지역적 유사성이 있는 小地域單位의 안보협력체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동북아에서 소유립안보

Yukio Satoh, "Asian Pacific Process for Stability and Security," the 5th Asia-Pacific Roundtable: Confidence building and Conflict Reduction in the Pacific(Kuala Lumpur: June 10~14, 1991).: Hisayoshi Ina, "A New Multilateral Approach for the Pacific: Beyond the Bilateral Security Network," (The Johns Hopkins Foreign Policy Institute papers, 1993).

13)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March 30, 1993. Kenichiro Sasae, *Rethinking Japan-U.S. Relations* (London: IISS/Brassey's, 1994), p. 27.

회의(mini-CSCE) 형식의 안보협력체를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한국의 다자간 안보대화 추진의도는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誘導하고 아태지역협력에 동참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다자간 안보협력체에 대한 한·일간 입장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나. 北·日 修交

(1) 北·日 主要懸案

(가) 北韓 核 및 安保威脅問題

일본정부는 교섭 초기 북한에 대해 修交의 條件으로서 i)남북 대화의 진전, ii)남북의 유엔가입, iii)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한 핵사찰을 제시했다.¹⁴⁾ 이에 대해 북한은 1991. 9 한국과 함께 유엔에 가입했으며, 1990년 말부터 남북고위급회담을 시작, 1991. 12 남북한간 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그리고 1992년에 들어오면서 북한은 IAEA 핵안전협정에 서명, 비준하고 6월 IAEA에 의한 核査察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일본측이 제시한 세가지 조건을 충족시켰다는 판단하에 제7차 수교교섭회담(1992.5.13~15)을 前後하여 일본과의 수교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강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일본측은 IAEA에 의한 핵사찰만으로 북한에 대한 핵의혹이 완전히 불식되지 않았다는 인식 하에 제7차 회담에서 북한이 南北相互査察을 수용할 것을 다시 요구하였다. 특히 1994년 6월 북한 핵문제로 인한 유엔의 대북한 제재조치가 검토되었을 당

14) 「朝鮮日報」, 1994. 10. 7.

시 일본의 하타 前정부는 유엔제재조치 뿐만 아니라 한·미 등 多 國家 제재조치에도 참여할 의사를 명백히 하였다.¹⁵⁾

1994년 7월 새로이 등장한 무라야마 연립정권은 유엔에 의한 제재조치는 참여하나 다국가 제재조치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¹⁶⁾ 일본정부는 1994년 8월 미·북한 3단계 제1차 회담 결과인 북한 핵문제의 現狀凍結에는 불만을 표시하는 한편 IAEA의 특별사찰에 의한 핵의혹 완전불식을 주장하였다.

이가라시 관방장관은 북·미 제네바합의(1994.10.21)로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인식을 表明(1994.11.29)하였다. 그는 북한을 방문할 「여당의원 방문 파견단」은 한일 양국정부와 3당 선언에 대한 협의를 갖고, 북한과 국교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노(河野洋平) 외무장관은 미·북한 경수로협상타결(1995.6.13)에 대해, “한국형 경수로 제공이 확인되어 한·미·일 3국입장이 확보되었다”고 평가(1995.6.14)하였다. 그는 이를 契機로 일·북간 수교 교섭을 早期 재개할 방침이라고 언급하였다.¹⁷⁾

(나) 補償·請求權 問題

북한은 교전상대국으로서의 戰爭賠償, 식민지시대의 인명피해에 대한 補償 및 전후 45년간 북한을 적대시한데 대한 보상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1965년 한국과의 국교정상화 과정과

15) 「朝日新聞」, 1994. 6. 2.

16) 「朝日新聞」, 1994. 7. 1.

17) 「朝日新聞」, 1995. 6. 15. 이 신문의 사설에서 일본은 “일·북 국교정상화 교섭도 북한이 경수로 전환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고 언급하였다.

절차를 모델로 하여 식민지시대의 재산권 및 청구권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과거사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명백히 했다(제4차 회담, 1991.8.30~9.2).

일본 연립여당(사회·자민·사키가케) 방문단은 1995년 3월 30일 북한 노동당과 북·일수교 교섭재개를 합의하였는데 이는 90년 자민·사회·노동당에 의한 3당 공동선언에 의해 북·일수교교섭이 시작되었다는 사실만 언급, 3당 공동선언에 明記한 「일본이 한국과 만 국교를 맺음으로써 북한이 본 피해도 보상한다」는 이른바 전 후보상문제는 議題에서 다루지 않기로 하였다.¹⁸⁾ 그런 점에서 보상, 청구권 문제는 일·북수교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항이라 하겠다.

(다) 過去 및 條約의 效力問題

북한은 對日 보상요구와 관련하여 1910년 한일합병조약 등 과거 제 조약은 일본이 무력으로 한반도를 침략했고 강요에 의한 일방적인 조약이라는 점에서 당초부터 無效라고 주장하는데 대해 일본측은 국제법상 지금은 무효가 되었지만 당시에는 有效한 조약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이 문제는 특히 보상의 근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보상문제와 함께 양측의 의견접근이 어려운 문제다.

(라) 「이은혜」 問題

일본측은 1991.5 제3차 수교교섭회담에서 김현희에 의해 밝혀진 일본 여성 「이은혜」의 신원확인을 처음으로 요구했다. 이에 대해

18) 「讀賣新聞」, 1995. 3. 30.

북한측은 「이은혜」의 신원을 확인할 경우 김현희에 의해 행해진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결과를 招來한다는 점에서 이 문제 자체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제3차 회담이후 상당기간 회담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招來되었다.

그러나 일본측은 1992년 11월 5일 북경에서 개최된 제8차 회담에서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하자 북한측은 즉시 회담 자체를 決裂시켰다.

(마) 經濟協力問題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矛盾과 냉전체제 붕괴에 따른 대외환경의 급속한 악화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 북한은 일본과의 수교를 통하여 일본 정부로부터의 보상금 등 경제적 지원을 얻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일본은 대북경제진출은 통해서 자원과 노동을 확보하는 동시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최대화하려고 한다. 따라서 일본은 미·북간 제네바합의이후 미국의 압력과 통제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수교교섭재개를 서두르고 있으며 대북경제진출에 있어서 한·미 양국에 지지 않으려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2) 韓國의 立場

북·일수교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북한과 일본의 수교에 의하여 일·북한간 경제교류가 이루어지고 남북한 경제교류가 증진된다면 이는 북한의 開放化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북한

의 경제력 증대와 이에 따른 한국의 통일비용 감소와 같은 효과를 발생시켜 한반도통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북수교는 한반도통일문제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증대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으며, 일·북한 경제교류는 남북한간의 경제교류 확대 및 상호보완성 증대보다는 경제교류의 필요성을 감소시키고 남북한간 및 한·일간의 競爭關係를 招來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 측면에서 일본은 남북한 양국에 대한 等距離外交를 전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한 관계개선의 필요성을 약화시키고 남북한을 정치·경제적으로 일본의 예속하에 두려는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은 북·일수교 이전에는 일본과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前述한 바와 같이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은 일본의 대북접근이 남북대화재개와 連繫되어 한반도안정 및 통일환경에 기여하기를 바라고 있는 입장이다.

다. 유엔常任理事國 地位追求

냉전체제 종결이후 1990년 걸프전쟁을 계기로 일본정부는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의사를 밝혔다. 1994년 6월에 出帆한 자민·사회·신당사키가케 3당 연립에 의한 무라야마(村山富市) 내각은 출범 초기 유엔 개혁의 진전, 아시아 인근제국의 지원상황 및 일본국민의 합의를 전제로 상임이사국 진출문제에 신중히 대처한다는 입장을 表明했으나, 9월 제49차 유엔총회연설에서 코오노(河野洋平) 외상은 헌법 테두리 내에서 상임이사국의 책임을

수행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다.

1994년 9월 27일 코오노 부총리 겸 외상이 제49차 유엔총회에서 행한 연설에 의하면, 전반부에서 「헌법이 금하는 무력행사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후반부에서는 「국제공헌에 관한 기본적인 생각 하에서, 안보리 常任理事國으로서 책임을 수행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일본정부의 계획은 拒否權(Veto)을 갖지 않는 상임이사국 지위를 늦어도 금세기 말까지 획득하는 것이다.

일본의 상임이사국진출과 관련하여, 미국의 베넷트 국무차관보(국제기구 담당)는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¹⁹⁾ 1994년 1월 28일과 7월 15일 미상원이 일·독이 유엔 PKO에 군사활동도 포함하여 참가할 수 있게 되기까지 양국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결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넷트 국무차관보는 일본이 군사행동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이를 지지할 것임을 명백히 했다. 그러나 새로운 상임이사국에 대한 拒否權 부여 여부는 다른 국가들의 의견을 참고할 생각임을 밝혔다.

영·불은 1994년 9월 28일 제49차 총회 연설에서 일·독이 拒否權을 포함한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表明했다. 그러나 프랑스는 상임이사국이 되는 모든 국가는 모든 PKO에 참가해야 한다는 견해도 함께 제시했다. 영국도 「국제적인 안전보장, 유엔의 작전에의 공헌」도 상임이사국의 조건이 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19) 「朝日新聞」, 1994. 9. 16.

중국은 「안보리 확대는 대표성의 지리적인 공평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문제에 대한 입장표명을 留保하고 있었으나, 1994년 9월 25일 「인민일보」는 일본정부가 히로시마 아시아 대회에 대만의 徐立德 행정원 부원장의 입국을 인정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의 최근 대만정책을 비판함과 동시에 「일본이 국제무대에서 지향하는 대국이라는 지위의 방향과는 반대의 결과를 招來하게 될 것이다」고 함으로써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비협조적 입장을 示唆한 것으로 볼 수 있다.²⁰⁾

러시아는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발언을 회피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금후 이 문제를 일본과의 외교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최근 일본정부는(1995.4.15) 유엔 안보이사회 常任理事國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국의 협력을 요청하면서 야나이순주(柳井俊二) 일본 외무청 총합외교정책국장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 현재 상임이사국처럼 拒否權을 갖는 상임이사국을 늘이는 것에는 반대하며, 거부권을 갖지 않는 제3의 상임이사국 그룹을 신설하는 방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유엔에 통보하였다고 말했다.²¹⁾

이러한 한국입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최근 일본은 유엔상임이사국 地位를 획득하여 경제력에 걸맞는 정치·외교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정치대국을 指向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 유엔평화유지

20) 「朝日新聞」, 1994. 9. 26.

21) 「朝鮮日報」, 1995. 4. 16.

활동(PKO)에 참여하고 있으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된다면 유엔 평화유지군(PKF)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본은 유엔을 위하고 분쟁해결을 위한다는 名分으로 군사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일본의 정치대국주의는 군사대국화 추세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러한 일본의 대국주의는 동북아의 세력균형을 무너뜨려 중국 등 주변국들로 하여금 군비경쟁의 加速化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면에서 인접국인 한국은 일본의 유엔상임이사국 진출문제에 대한 입장절충 및 신중한 입장을 堅持하고 있다.

2. 經濟分野

가. 貿易逆潮

한·일간의 經濟懸案은 무역역조 및 산업기술 이전문제이다.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29년동안 대일무역적자 총액은 약 850억불로 한국의 전체무역 적자에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²²⁾

한국의 대일 무역역조 현상은 국교정상화이후 계속되었으며, 특히 한국이 86~89년 경험했던 경상수지 흑자 시대에서 90년 경상수지 적자로 反轉되면서 다시 양국관계의 심각한 문제로 되었다.

한국측은 대일 무역적자의 원인이 일본측에 있다고 주장한다. 즉, 일본의 경제구조가 개방되어 있지 않고 閉鎖的이기 때문에 대

22) 한국은행 조사1부, “最近의 對日貿易赤字要因과 向後 課題,” (조사연구자료 92-9) (1992. 5), p. 1.

일 수출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첨단제품의 수출을 위한 기술이전을 기피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기술이전에 있어서도 한국의 산업구조가 대기업위주의 구조로서 기술이전시 부메랑효과를 우려하여 일본기업은 技術傳受를 기피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반면, 일본측 주장은 무역불균형은 양국간 산업구조의 차이에 서 파생된 것이며,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자본재와 부품으로 수출증가를 이루었으므로 대일 무역불균형은 한국경제에 있어 障礙要因이 아니라 寄與要因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²³⁾ 특히 최근에는 한국내 노사분규, 이윤기회축소, 원화의 평가절상 등으로 기업의욕과 수출이윤이 크게 감소되었기 때문에 일본기업에 대한 직접투자도 감소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 産業技術移轉問題

기술이전문제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부메랑효과를 의식한 일본 민간기업들의 技術移轉 기피현상이다. 그러나 일본은 기술이전 감소요인이 한국의 경제적인 매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한일경제관계자료」에 따르면 1962년부터 1990년까지 한국의 대일기술도입 건수는 모두 3,536건으로 전체 대외기술도입 건수의 50.9%를 차지했으나 1989년 46.6%, 1990년 45.1%, 1991년 1~9월 46.7% 등 근래에 들어 현격

23) 松本厚治, 「日韓經濟摩擦: 韓國エコノミストとの論争」(東京: 東洋經濟新報社, 1986); 松本厚治, “對日貿易逆調は日本の責任ではない.” 「現代コリア」(1992년 1월), pp. 16~19.

히 낮아지는 趨勢에 있다. 또한 기술도입에 따른 기술이전료의 지급에 있어서도 1962년부터 1990년까지 일본에 대한 지급액은 총 15억 4,000만 달러로 전체 지급액의 31.2%에 불과해, 미국·유럽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급수준의 기술이 도입되었음을 示唆하고 있다.²⁴⁾

3. 過去清算問題

과거청산문제는 한일관계에 있어서 어떤 때는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 있어서 과거 제국주의적 국가행위에 대한 서술문제로(1983년), 혹은 외국인 등록증 휴대의무나 지문날인 등과 같은 제일 한국인 법적 지위문제로 表出되었다. 다른 경우 한국대통령의 일본 방문이나 일본총리의 한국 방문 시에 총리의 한국 국민에 대한 식민지 지배 사과에 있어서 용어선택문제로 표출되기도 하였다. 91년 노태우 대통령 일본 방문시 일본 천황은 “일본에 의해 한국의 국민들이 겪었던 고통에 대해 痛惜의 念을 禁할 수 없다”고 하여 사과의 뜻을 표시하였다.

과거사에 대한 사과문제에 관하여 일본내 한국문제 전문가 사이에는 천황과 총리가 한국대통령 앞에서 공식적인 사과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문제가 懸案이 될 때마다 정부차원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²⁵⁾

1992년에는 과거청산문제가 태평양전쟁시기 일본정부가 한국여

24) 이승훈, “기술협력의 일반상황,” 안병직編, 「일본의 산업기술」(서울: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1991), p. 269~270.

25) 田中 明, 佐藤勝己, “謝罪するほど悪くなる日韓關係,” 「文藝春秋」(1992년 3월), pp. 134~142

성을 종군위안부로 강제동원한 행위에 대한 사과와 그 보상문제로 表出되었다. 한국의 여론은 종군위안부 동원에 대한 정부차원의 사과와 종군위안부로 동원되었던 희생자가 생존해 있으므로 그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본정부는 한·일 국가간 보상은 1965년 국교정상화 당시 재산청구권 자금에 의해서 모두 해결되었다는 입장에서 종군위안부에 대한 정부 對 정부차원의 보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종군위안부로 動員되었던 한국 여성은 일본정부에 대해서 일본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전후 50년을 맞이하여 일본정부내에서도 과거청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종군위안부사항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²⁶⁾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 전임정부와 다르게 김영삼대통령은 1993년 3월 13일 종군위안부 등 과거역사문제에 있어서 “금전적 보상은 요구하지 않으나, 과거사실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인식은 요구한다”²⁷⁾고 피력하였다.

일본의 과거사문제는 일본의 國際役割 증대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아시아국가들은 철저한 일본의 과거청산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본의 역할증대를 軍國主義의 延長이라고 불신하기 때문이다.

村山내각은 발족 당시 과거전쟁에 대한 반성의 표명을 “전후50년의 결의”로 국회에서 채택하고자 합의하여 정책합의 사항으로서

26) 일본정부는 민간기금을 통해서 보상을 한다는 구상 아래 1995년 6월중 기구를 설립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朝日新聞」, 1995. 6. 15.

27) 「朝鮮日報」, 1993. 3. 14.

公表하였다. 그러나 찬반 논쟁후 일본의 연립여당은 1995년 6월 10일 중의원에서 不戰결의안을 채택(「역사를 교훈삼아 평화결의를 새로이 하는 결의」)하였다. 자민당의 우익세력이 「不戰」은 자위전쟁마저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죄」 또한 아시아 각국의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가 있다는 것이라며 「不戰·사죄」란 단어조차 사용하지 않도록 압력을 넣은 결과 두개의 단어가 삭제되었다.

최근 이러한 움직임과 관련, 와타나베 미치오(渡邊美智雄) 前일본 외상은 1910년의 한일합방조약은 당시 국제관계의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원만히」 체결된 것으로서 무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 일본의 보수우익이 가지고 있는 역사인식은 무엇인가?

첫째, 일본이 주도한 대동아 전쟁은 아시아 해방을 위한 전쟁이다. 둘째, 한일합병은 한반도가 강대국에 속국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셋째, 일본은 한국인에게 기초교육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한국인은 세계식민지 가운데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民도가 높아졌다. 넷째, 남경 학살은 사실과 달리 잘못 전해지고 있다. 일본의 보수세력은 자국의 과거 침략행위를 평가하면서, 그러한 행위가 서구세력에 대한 국가적 대응에 불과하다고 인식하며, 규범적으로 한국의 식민지 지배나 중국에 대한 침략행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²⁸⁾ 일본의 우익세력들은 이러한 歷史觀을 所信으로 표명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새로운 한일 우호관계의 건설을 매우 해치고 있다.

28) 田中 明, 佐藤勝巳, “謝罪するほど悪くなる日韓關係,” 「文藝春秋」, 1992년 3월, pp. 134~42.

그러면 왜 일본인들은 과거사에 대한 역사인식이 부족한가?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인 오에겐 사부로(大江)는 일본이 저지른 전쟁 범죄 보상문제 특히 군대위안부에 대한 협상에 불리하기 때문이라는 경제적 동기로 설명한다.²⁹⁾ 일본은 나치의 아류인 군국주의와 단절하지도 않았고, 과거를 청산할 의지도 없었다. 일본인 제일주의도 버리지 않았으며 천황주의라는 이데올로기에서 해방될 용기도 없었다. 따라서 일본인의 눈물은 피해보상이란 경제논리를 앞세운 天皇主義·優越主義 논리에 기인한다. 사무엘 헌팅톤은 일본문명이 마치 독자적 문명인양 독립시켜 일본국학론자들의 치밀한 작업 속에 日本特殊主義라는 差別化 작업을 조작함으로써 일본우월주의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³⁰⁾

이상과 같은 詭辯으로서 일본은 과거를 미화하고 일본제국주의에 대해 반성을 하려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반성없는 일본에 대해 대부분의 한국인은 일본에 대해 친밀감이 없다고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하였다.³¹⁾ 한·일관계가 正常화된지 5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한·일 양국은 불신의 벽을 허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거사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과거사문제가 더 이상 양국관계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며 과거사문제해결을 위한 3대원칙을 천명하였다. 이는 첫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사, 둘째, 상대방에 대한 편견없는 이해노력과 對국민홍보, 셋째, 공동 이익영역의 발굴 및 활용 등이다.³²⁾

29) 「世界日報」, 1995. 6. 4.

30) 「朝鮮日報」, 1995. 6. 6.

31) 한국인의 84%가 일본에 대해 친밀감이 없다고 응답하였는데 이에 대한 큰 이유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것이다. 「中央日報」, 1995. 7. 27.

第Ⅳ章 韓·日關係 變化要因과 展望

1. 變化促進要因

한·일관계 변화에 대한 개념은 첫째, 냉전시대에 비해 냉전이후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이익의 自國中心化가 심화되었다는 것이며, 둘째, 냉전구도 붕괴이후 전략적 안보협력관계가 選擇的 概念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며, 셋째, 일본의 南北 等距離外交 가능성이 증대되는것 등을 들 수 있다.

한·일관계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는 현안의 북·일수교외에도 일본의 국제역할증대 정책의 일환인 미·일관계 再調整, 군사현대화 및 해외파병정책 그리고 일본의 신보수주의화 등을 변수로 볼 수 있다.

가. 美·日關係 再調整

미·일 양국은 냉전 종결, 소련의 해체, 미·일경제의 역학관계 변화 등 미·일 안보체제를 둘러싼 戰略環境에 있어서의 근본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우선 러시아의 잠재적 군사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상당기간 일본과 군사협력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미국은 냉전후의 미·일 안보체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

32) 「朝鮮日報」, 1993. 6. 30.

을 堅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미·일 안보체제는 소연방 해체 이후 최대의 潛在的 라이벌인 일본의 독자적 군사노선 내지는 패권국추구를 막는 효과적인 틀이라는 점이다.³³⁾

둘째, 미·일 안보체제의 글로벌化이다.

미국은 소연방 해체 이후 유일한 超강대국으로 등장하였으나 혼자서 힘만으로 냉전후의 국제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미·일 안보체제유지로 분쟁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 걸프전쟁은 바로 이러한 점을 克明하게 드러낸 사례였다. 특히 일본의 경제력은 미국주도의 新國際秩序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극히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미국의 부시대통령과 일본의 가이후수상은 1992년 2월 「미·일 글로벌 파트너십에 관한 동경선언」을 발표한 바, 미·일 동맹관계는 글로벌 파트너십의 基盤이 되고 있다.³⁴⁾ 최근 미국과 일본정부는 미·일 안보체제의 목적을 일본 단독방위에서 아태전역의 평화와 안정을 주축으로 전환하는 「뉴비전」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

33) U.S. Department of Defense, *Force Structure Excerpts, Bottom-Up Review*(Sep. 1, 1993). 에스핀 미국방장관이 1993년 9월에 발표한 「전력편성의 전반적 재검토」(Force Structure Excerpts, Bottom-Up Review)는 전방 전개될 해외군사력의 삭감을 담고 있으며, 대서양 방면의 경우 약 20만에서 10만으로 대폭 삭감함에도 불구하고 아시아태평양 방면의 경우에는 10만명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주일 미군의 감축은 클린턴정부도 생각하고 있지 않음을 뒷받침하였다.

34) 「朝日新聞」, 1992. 2. 2. 이 「동경선언」에서 보듯이 미국이 일본과의 글로벌 파트너십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여 미·일 안보체제의 영역을 방위문제에 그치지 않고 지역분쟁, 대량살상무기 확산, 난민, 환경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확대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다.

다.³⁵⁾ 뉴비전은 옛소련의 위협에 공동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던 미·일 안보체제를 이용하여 저비용으로 주도권을 유지하면서 지역분쟁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질적으로 轉換하는 것이다.³⁶⁾

또한 조셉나이 미국방부 국제안보담당차관보는 최근 냉전 종결 등의 전략환경의 변화와 함께 다자간 안보체제에 관한 미국의 관심은 점차 커지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독자적 노선을 다자간 안보의 틀 속에서 消化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³⁷⁾

셋째, 냉전후 미국의 중대한 이익인 동아시아의 안정적 균형에 있어 위협세력은 현재 중국일 것이며, 장기적으로 미국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일·중 連繫일 것이다. 중국의 지속적인 군비 증강과 동아시아에서의 패권적 의도는 미국과의 심각한 마찰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³⁸⁾

현재 미·중의 마찰 양상은 중국의 人權問題, 대외무기수출문제, 미국의 대만에 대한 전투기 판매문제, 그리고 대만총통 방미 등으로 表出되고 있다.³⁹⁾

35) 「毎日新聞」, 1995. 2. 7.

36) グレン・フクミマ, 本間長世, 五十嵐武士, “クリントン 政權2年目の課題と日美關係,” 「國際問題」, 1994年 2月(No. 407), p. 14.

37) Joseph Nye, “Coping with Japan,” *Foreign Policy* 89 (Winter 1992~93), pp. 96~115.

38) Hisahiro Kanayama, “The Future Import of Energy Problems in China,” *IIPS Policy Paper*, 124E (June 1994), pp.5~23. 특히 주목되는 점은 미해군의 수빅灣 철수와 극동 소련 합대의 캄란기지 철수를 계기로 초래된 힘의 공백을 중국 해군이 메우려 한다는 점이다. 중국은 「大洋海軍」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이러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남사군도를 비롯한 남지나해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려 하고 있는 실정이다.

39) Michel Oksenberg, “China and the Japanese-American Alliance,” in Gerald L. Curtis (ed.), *The United States, Japan, And Asia*, (N.Y.:

미국으로서는 미·일 안보체제를 계속 견지함으로써 아시아에 있어서 중국의 라이벌인 일본을 활용할 수 있는 한편, 실질적인 문제로 미군의 일본내 기지 사용권을 확보하여 중국을 군사적으로牽制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최근 미국내에서는 미·일 안보조약 堅持에 대한 반대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첫번째 의견은 소련의 붕괴로 미국과 일본간의 동맹은 필요성을 상실했으며 따라서 일본과 중국, 아세안간의 세력균형을 維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냉전이후시대에 있어서 미국의 이익이 미·일안보를 유지하는 것보다 중국·아세안 국가들과 勢力均衡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⁴⁰⁾

두번째 견해는 명분에 의한 미·일관계는 미국의 입장을 강화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냉전시대에 고착화된 미국의 해외에 대한 過剩關與를 축소시켜야 한다고 보는 미국내 新孤立主義者들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⁴¹⁾ 커티스 교수에 의하면 이러한 견해들은 시기적으로 완급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멀지 않아 미국정가에서 미·일 안보조약에 대한 수정논의로 발전될 것으로 보고 있다.⁴²⁾

W.W. Norton & Co., 1994), p. 100.

- 40) Chalmers Johnson, *Japan Who Governs?: The Rise of the Developmental State* (N.Y.: W.W.Norton & Co. 1995), pp. 69~95; Chalmers Johnson, "Where's Chinton on Asia?," *New York Times*, Feb. 8, 1993.
- 41) Chalmers Johnson and E.B. Kechen, "The Pentagon's Ossified Strategy," *Foreign Affairs*, Vol. 74, No. 4, p. 114.
- 42) Gerald L. Curtis, "Meeting the Challenge of Japan in Asia," in Gerald L. Curtis (ed.), *The United States, Japan and Asia* (N.Y.: W.W.Norton & Co., 1994), pp. 216~252. Glen S. Fukushima, *日美經濟摩擦の政治學*, (東京: 朝日新聞社, 1993), pp. 157~164.

이같은 미·일 안보수정론은 미국정부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前述한 바와 같이 클린턴 행정부는 역대정권과 마찬가지로 미·일안보를 지속적으로 견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미·일 안보 再調整에 있어서 일본의 입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향후 일본은 주권국으로서 대외 정치·군사 활동에 대한 제약을 타파하려 할 것이며, 특히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에 합당한 국제적 역할과 영향력을 摸索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의 미·일 안보체제에 대한 사고는 첫째, 미·일 동맹은 절대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 미·일 안보체제를 유지하되 지역주의와 유엔중심주의를 강조함으로써 사안에 따라 自主性を 넓혀 나간다는 것이다.

일본이 미·일 안보체제를 견지하겠다는 배경에는 결국 미·일 동맹관계는 일본의 死活的(vital) 이익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⁴³⁾ 안전보장면에 있어서도 러시아, 중국의 핵보유가 계속되는 이상, 미국의 핵 억지력은 앞으로도 일본의 안전을 위해 不可缺하다.⁴⁴⁾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인도양에 있어서의 미해군의 존재는 일본의 1,000해리 해상교통로 방위정책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미·일 안보체제는 정치적으로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전요인이 되고 있다.

유엔중심주의자들의 입장은 걸프전쟁 당시 일본은 막대한 재정

43) 佐蘇行雄, “求めらある日本の發想轉換,” 「外交フォーラム」, 1993年 1月號, p. 29.

44) 奥宮正武, アナリを頼りに出来るか, (東京: PHP研究所, 1995), pp. 117~118.

적 지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평가받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인들로 하여금 미·일 안보체제로부터 어느 정도 獨自性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契機가 되었다.⁴⁵⁾ 일본은 유엔평화유지활동(PKO)참여,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추구 등 유엔 중심주의를 강조하여 미·일 안보의 틀 속에서 合法的으로 자주성을 넓힐 수 있는 길을 갖고 있는 셈이다.

地域主義者들의 입장은 미야자와 독트린에서도 천명되었듯이 다자간 안보협의체가 미·일 안보체제를 代替한다기보다는 미국을 축으로 하는 안보협의체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1995년 5월 29일 일본의 다마자와 방위청장관은 구소련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북방중시의 방위전략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역점을 두는 全防衛형태의 방위전략을 지향할 것임을 밝혔는데,⁴⁶⁾ 이는 미·일 안전보장체가 실질적으로 양국간의 차원을 넘어 擴大·發展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일본은 아·태지역의 강대국으로서 정치대국화를 지향하는 전략적 차원에서 한국·중국·러시아 등 지역국가들과 양국간의 군사교류를 넓혀 相互透明性을 높이는 한편,⁴⁷⁾ 미·일 안전보장체제를 아시아 각국으로 連繫시키는 지역중심의 다자간 안보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본의 이와 같은 역할확대 전략의 전개에 따라 아·태지역의 다자간 안보체제에서 이니셔티브

45) 室山義正, 「日·美 安保體制」(上) (東京: 有斐閣, 1992), pp. 20~24.

46) 「朝日新聞」, 1995. 5. 30. 이는 앞에서 기술한 미·일 양국이 준비중에 있는 「뉴비전」과 일치하는 것이다.

47) 「産經新聞」, 1995. 9. 14; 일본정부는 동남아 국가들뿐 아니라 한·중·일 등이 참여하고 있는 아세안지역포럼(ARF)과의 군사교류를 추진하여 군비투명성과 신뢰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방위청 고위당국자(군비담당실의 오모리게이지(大森敬治)심의관)를 9월 24일부터 1주일간 파견한다고 밝혔다.

(initiative)를 가질 수 있고, 또한 역내 국가들로부터 군비증강에 대한 불필요한 우려를 緩和시킬 수 있으며, 아울러 對美관계에 있어서도 교섭능력(bargaining power)을 제고시켜 보다 자주적 입장에서 안보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향후 미·일간 경제문제를 둘러싼 마찰이 전통적 의미의 전략적 이해를 退色시킬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일 양국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제관계가 미·일 동맹관계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미·일 안보체제는 변화된 전략환경을 반영하여 군사적 의미보다는 정치적 의미를 보다 중시하는 동맹관계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냉전이후시대의 미·일 동반자관계 구축에 따른 양국간의 역할분담 증대를 名分으로 세계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도 자국의 이익에 입각한 자주적인 南北韓 等距離外交를 추진할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역할증대정책은 한반도 통일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나. 軍事現代化 및 海外派兵政策

일본은 공산권의 붕괴로 야기된 러·중·북한의 국내정세 불안을 이용하는 한편, 미·러의 군사력감축에 따른 힘의 空白을 메우면서 동북아 및 아태지역에서 군사대국으로 跳躍하고 있다.⁴⁸⁾

48) 일본의 최근 「50중기방위력정비계획」은 지역방위에서 전진방어를 위한 공격적 성격의 방위로 변모되는 추세에 있다. 한국국방부가 일본방위전략이 「공격적으로 변했다」고 기술한데 대해 히요시 아키라(日吉章) 일본방위청 차관은 「공격적이 아니라 적극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일본은 특히 중국해군이 전술행동차원이 아닌 전략작전능력을 개발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고 중국의 해군력 증가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다.

1994년 2월 28일 호소카와(細川護熙) 수상의 사적 자문기관으로서 설치된 「防衛問題懇談會」의 기능은 1976년에 일본 방위정책의 기본 지침으로 책정된 「防衛計劃大綱」을 재검토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강의 재검토는 냉전시대 위협요인으로 규정되어 왔던 蘇聯邦의 해체와 동·서냉전의 종료라는 국제환경의 변화, 8당파 합의로 성립된 호소카와 연립정권내에 군축 지향적 성격이 강한 점, 그리고 자위대원 모집난 및 방위비 감축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등의 필요성에 기인한 것이다.

戰後 일본의 방위정책은 크게 「방위계획대강」, 미·일 안보체제, 그리고 유엔 PKO 참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겠다. 1976년에 책정된 「방위계획대강」은 일본에 대한 「한정적 소규모」의 침략에 미국의 지원이 있기까지 대응할 수 있는 방위력을 갖추며, 핵의 위협은 미국의 核抑止力에 의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1976년에 책정된 「방위계획대강」은 미·소 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서간 긴장관계를 대전제로 해 왔으나, 동·서 냉전의 종결로 美·英 등 서방제국에 의한 러시아의 위협요인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軍縮 추세로 나아감에 따라 일본은 「防衛計劃大綱計劃(1991년 ~1995년)」의 조기 수정 결정, 방위비의 감소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방위계획대강」(1976) 자체가 대체적으로 이미 목표를 달성했으나, 일본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유엔 하에서의 자위

대의 해외활동을 통한 國際貢獻이 「방위계획대강」(1991~1995)에서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재검토가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방위계획대강」의 再檢討 움직임이 일본 방위력의 축소, 안보차원에서의 정치·군사적 역할의 축소 내지 포기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겠다.

방위청은 「방위대강」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은 지속적인 軍事力 現代化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⁴⁹⁾ 첫째, 필요최소한도의 방위력 정비 기준이 되고 있는 기반적 방위력 수준은 불변, 둘째, 해·공 자위대의 전투장비는 현수준 유지, 셋째, 육상자위대의 현재 총원율(18만명)을 고려, 15만명 체제유지, 넷째, 유사시 방위력 증강을 위한 예비자위관제도 확립, 다섯째, 불안정요인의 조기포착을 위한 정보수집 능력강화, 여섯째, 즉응태세 완비를 위한 기동력, 수송력 강화, 일곱째, 북한, 중국의 미사일에 대응 가능한 TMD 구상, 여덟째, 자위대의 원활한 국제공헌 활동을 보장하는 PKO 여건 정비 등이다.

또한 방위청이 마련한 방위대강의 기본방침에는 「냉전을 전제로 한 위협대처형 방위정책이 냉전종식을 契機로 변화할 수 밖에 없다」는 전제아래 아직까지 새로운 안보체제가 마련돼 있지 않은 아태지역에서 안보대화를 추진함으로써 다각적인 안보협력체제 구축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堅持하고 있다. 그러나 방위청은 일본의 안보가 어디까지나 미·일 안보체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49) 「朝日新聞」, 1994. 8. 12.

만큼 이를 보장하는 선에서 아태국가들과 안보대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⁵⁰⁾

요컨대 신「방위대강」은 선진국의 군비억제 경향, 국내의 정권교체, 그리고 재정사정 등 국내의 요인을 고려하여 外形적인 縮小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일본을 21세기의 새로운 군사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군사현대화 및 해외파병 기동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防衛構想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신국방전략의 최우선 과제의 하나인 TMD 공동개발을 일본에 요구함으로써 일본헌법상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문제를 Sea lanes 방위에 이어 다시 제기하고 있다.⁵¹⁾

아이찌(愛知) 방위청장관은 1994년 3월 14일 미국의 전역미사일 방위(TMD) 협력 요청에 대해 TMD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참가 표명은 피하면서도 미·일 동맹관계 중시라는 입장에서 「방위계획대강」 재검토에 의한 금후의 新指針에 對미사일 방위체제의 필요성이 포함되도록 검토할 방침임을 강조했다.⁵²⁾

1994년도 일본의 방위예산은 4조6천7백88억엔(GNP比 0.947%)이며, 이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에 달하고 있다.⁵³⁾ 또한 일본은 자위대의 활동영역 확대정책으로 1994년 르완다, 소말리아 등 UN의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했으며, 앞으로도 PKO활동에 적극 참

50) 「朝日新聞」, 1995. 3. 15.

51) Patrick M. Cronin and Michael J. Green, Redefining the U.S.-Japan Alliance: Tokyo's National Defense Program, (Washington,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1994), pp. 12~13.

52) 「讀賣新聞」, 1994. 3. 15.

53) Military Balance 1992~1993.

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4년 4월 26일 새로이 수상이 된 하타내각의 외교·안보담당 각료들에 의해 헌법논의가 다시 전개되었다.⁵⁴⁾ 헌법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는 「보편적 안전보장」의 개념이다.

「보편적 안전보장」 개념은 일본 헌법상 금지되고 있는 집단적 自衛權 행사와는 다른 새로운 헌법해석의 개념을 導入한 것으로써 유엔에 의한 집단적 안전보장과 거의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 즉, 「일본국 헌법은 유엔에 의한 보편적 안전보장을 이념으로 하고 있음을 인식하며, 세계의 평화와 일본의 안전보장을 피하기 위해 일·미 안보조약을 유지하면서 유엔의 평화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러한 헌법개념의 해석으로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려하고 있다.

다. 韓半島 影響力 擴大摸索

일본은 동북아질서의 변화, 미·일간 世界的 同伴者關係 구축에 따른 일본의 역할증대, 북한의 대일접근 정책을 계기로 한반도에서 독자적인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全力하고 있다.

북한과 일본의 수교에 의하여 일·북한간 경제교류가 이루어지고 남북한 경제교류가 증진된다면 이는 북한의 개방화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경제력 증대와 이에 따른 한국의 통일비용 감소와 같은 효과를 발생시켜 한반도 통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북한수교는 한반도통일문제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 증대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으며, 일·북한 경제교류는

54) 「朝日新聞」, 1994. 4. 27.

남북한간의 경제교류 확대 및 상호보완성 증대보다는 경제교류의 필요성을 감소시키고 남북한 및 한·일간의 경쟁관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 측면에서 일본은 남북한 양국에 대한 等距離外交를 전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한 관계개선의 필요성을 弱화시키고 남북한을 정치·경제적으로 일본의 예속 하에 두려는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일·북한수교 후 주변4강에 의한 교차승인이 이루어지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국제적으로 보장하는 경우 일본을 비롯한 주변4강은 순수한 한반도의 평화보장 차원을 넘어서 남북한의 통일 움직임을 제약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를 취하거나 4강간의 경쟁을 深化시킬 가능성이 있다.

라. 日本의 新保守主義 強化

일본 연립정권이 1995년 7월 23일 탄생한 후 처음으로 실시된 참의원선거는 무라야마총리가 이끄는 사회당이 예상대로 참패함으로써 향후 연립여당내 政治版圖가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사회당이 호소카와연정에 참여한데 이어 1994년 자민·사키가케와 연정을 구성한 이래 혁신정당의 깃발을 내리고 자위대 合憲, 國기·國歌 인정 등 정책전환을 단행한 결과 기존 지지자들이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사회당의 참패에 따라 무라야마총리 등 사회당집행부의 책임문제가 거론되었지만, 연립3당 대표 및 간부들은 자민·사회·사키가케의 의석수가 참의원 126석의 과반수(65석: 자민 46, 사회 16, 사키가케 3)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무라야마총리를 交替하지 않기로

의견일치를 보았다.⁵⁵⁾

연립여당인 신진당은 구공명당의 지지기반에 힘입어 의석수를 크게 신장(39석)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신진당의 躍進으로 일본의 정치판도는 기존 자민·사회당의 보·혁체제에서 명실상부한 자민·신진당의 「보수양당체제」로 改編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계재편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일본에서는 당분간 정당구도 재편과정에서 정치적 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확고한 리더십이 부족한 차기정권 하에서는 정치·안보분야에서의 급격한 정책변화나 혹은 통상분야에서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대외정책은 脆弱한 정치적 리더십에도 불구하고 신보수주의자들의 독세에 따라 일본자신의 국가목표와 이익에 기초하여 보다 독자성을 강조하면서 점진적으로 국제적 역할을 증대하는 趨勢를 보일 것이다.

특히 신생당의 실질적인 지도자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는 일본의 자위대 법개정 등 적극적인 국제역할 증대를 주장해 왔으며, 하타 쓰도무, 호소카와, 무라야마총리 등도 한국 등 아시아국가들에 대한 과거사로 인한 부담을 청산하고 새롭게 아시아에서의 지도적인 역할을 추구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⁵⁶⁾ 오자와는 냉전종식, 걸프전 등 변화하는 국제정세하에서 일본이 더 이상 자국의 안보와 번영을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할 수 없으며, 비정상적인 平和主義를 버리고 「보통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⁵⁷⁾ 더욱이 일본에 保守兩黨體制가 형성되고 오자

55) 「朝日新聞」, 1995. 7. 24.

56) 「朝日新聞」, 1995. 6. 10.

와의 신생당과 같은 신보수주의 성향의 정치세력이 집권하게 되면 과거 보혁대결 구도하의 사회당과 같은 견제 세력이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일본은 國際的 役割增大에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2. 持續要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한·일관계를 變化·促進시키는 요인이 있는가 하면, 양국관계를 지속·유지시키는 요인도 존재한다. 지속요인은 미국의 均衡者 役割, 한·미 관계유지, 그리고 한·일 경제협력 및 교류확대 등이다.

가. 東北亞에서의 美國의 均衡者 役割

미국은 태평양 연안국들과 가지고 있는 정치·경제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지역에 군사력 前進配置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것이다. 미국은 調整者로서 이 지역의 안정과 안보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적 패권국가들이 이용할 수 있는 힘의 空白을 미연에 방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통일이행기에 북한체제의 붕괴로 야기될지도 모르는 한반도의 혼란과 전쟁위험을 막기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또한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들도 한반도 통일과정 및 통일후의 동북아 안정을 위하여 주한미군이 地域 均衡者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57) 洪林正夫·山田敬男·大久保賢, “憲法と平和を考える,” (동경: 學習の友社, 1995), pp. 35~36. Richard, P. Cronin, Japan's New Era of Coalition Governance: Implications for U.S. Interests and Policy (Washington D.C.: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Defense Division, 1995, p. 8.

나. 韓·美關係 維持

한·일간의 안보관계에 있어서 큰 특징은 미국을 仲介로 하는 관계이다. 한·일 안보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큰 틀은 한·미와 미·일 안보체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대한반도정책은 한·미와의 戰略的 紐帶關係로 상당기간 미국의 동북아정책의 틀 내에서 전개될 것이고, 또한 일본은 한국에 갖고 있는 안보 및 경제적 이익을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한국편향의 南北韓 等距離外交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 韓·日 經濟協力 및 交流擴大

한국과 일본은 1965년 국교를 수립하였다. 이후 양국은 국제정치, 경제, 문화, 기술 등을 포함하여 여러 측면에서 교류를 擴大하였다. 양국의 관계확대를 무역면에서 보면 1965년에는 양국 교역액이 2억4천만달러에 불과하였으나, 1994년에는 약 389억달러 수준이 되었다. 또한, 1993년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을 방문한 숫자는 약 107만명에 到達하고 있다. 양국간 관계확대는 역사, 정치, 경제, 안보, 문화, 민족, 지리, 환경 등 여러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교류확대는 한·일관계를 持續시키는 要因으로 작용할 것이다.

3. 展望

한·일간의 主要懸案을 외교안보와 경제분야로 나누어서 한·일관

계를 전망해 보기로 한다. 외교안보분야의 첫번째 현안은 한·일 양자간의 군사협력교류와 다자주의를 통한 지역안정 모색이다.

일본은 최근 구소련의 위협에 대한 방위전략에서 아·태지역에 역점을 두는 방위전략을 기조로 한국·중국 등 역내국가들과의 군사교류의 透明性을 제고시키는 한편, 미·일 안보체제를 連繫시켜 적극적으로 다자간 안보협력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한반도의 안정과 관련하여 북한핵무기, 노동1호 미사일개발, 그리고 북한정권의 급작스런 붕괴 등에 대해 한국과 인식을 공유하면서 한·일 군사정보의 교류를 확대시키고 있다.

그러나 한·일 양국의 안보협력은 상호신뢰를 造成하는 안보대화, 정보교류(반공식별권, 주변국 정보교환, 군비의 투명성을 위한 정보 등), 합동군사훈련(한·일 PKO 공동훈련 등)을 통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신뢰구축의 양국관계를 형성하는 轉機가 될 것이다.

韓·日 安保協力은 그 목적자체가 명백하고 한계도 분명하다. 일본은 헌법상으로는 어느 나라와도 방위산업을 함께 하거나 방위물자를 수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에서 한국이 안보교류를 추진한다 할지라도 일본 헌법상의 制約을 인식하고 그 범위 내에서 협력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한일의 실질적인 軍事協力は 2000년까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자간 안보협력모색에 대한 전망은 다음과 같다. 최근 일본은 미국과의 世界的 同伴者關係를 구축함에 따라 역할중대를 모색하고, 또한 주변국가들로부터 군사대국화를 추구한다는 憂慮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다자간 안보협력을 추구하고 있으며, 한국은 한

반도 안정을 위해 북한의 동참을 목표로 小유럽안보회의의 形式의 安保協力體를 주장하였다. 최근 이러한 안보협력체 구상에 대하여 조셉나이가 주장한 바와 같이 미국도 관심을 高潮시키고 있다. 또한 역내 국가들은 유럽의 안보협력회의(CSCE)와 같은 多變的인 협력체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이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현재 역내에 존재하는 戰略的 非對稱性和 이익의 다양성을 감안할 때 2000년내로 「아시아 안보협력회의」(CSCA)나 이와 유사한 기구를 결성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일 양국은 동북아정세를 流動的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동북아질서를 위한 다자간 안보협력에 대한 논의를 실질적으로 活性化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일 양국의 논의는 신뢰구축, 정보교환 차원에서 바람직한 관계설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 현안인 북·일수교의 展望은 다음과 같다. 일본의 이가라 시관방장관은 북·미 제네바합의(1994.10.21)로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인식을 表明(1994.11.29)하고 곧 북한과 국교협상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⁵⁸⁾ 취약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일본여당은 북·일수교를 맺음으로써 수교업적을 국민에게 과시하여, 불안정한 정국을 안정시키려고 적극적인 수교교섭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양국은 국교재개 교섭회담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못하고 있다. 이는 양국간의 懸案들(식민지시대의 보상문제, 과거사 문제 그리고 「이은혜」문제 등)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58) 「朝日新聞」, 1994. 10. 21.; 「讀賣新聞」, 1994. 11. 30.

또한 北·日修交는 北·美修交와도 連繫되어 있어서 일본은 미국의 입장을 살피지 않을 수 없고 한국의 입장도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독자적 수교교섭에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북·일수교 교섭재개는 북·미의 영사관설립 以後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일 국교수립은 최소한 향후 1년 이상의 세월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북·일 국교수립이후 자국의 이익에 입각한 독자적인 남북한 等距離 外交를 추구할 것이므로 한·일관계는 「協力과 牽制」의 경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세번째 현안은 일본의 유엔안보리 常任理事國 진출문제이다. 최근 미국은 미·일 안보조약에 입각한 양국협력을 PKO 등에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일본의 이사국진출에 대한 의사를 表明하였다.⁵⁹⁾

그러나 유엔안보리 改編問題(안보리 의석수, 상임이사국의 선출 기준 등)에 대해 5대 상임이사국의 입장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었을 경우 상임이사회의에서 군사적 PKO(PKF)를 결정하면 일본도 참여해야 하는데 이는 일본헌법에 違背되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이 2000년까지 유엔 상임이사국에 진출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한·일양국은 일본의 유엔상임이사국 진출문제로 크게 갈등상황에 빠지거나 불편한 관계를 맞이하지는 않을 것이다.

경제분야의 현안인 貿易逆潮·技術移轉問題는 현재 한국이 일본

59) 「朝日新聞」, 1995. 9. 5.

으로부터 년 100억불 정도의 무역적자를 내는 부정적 요인이지만 현재 경제논리에 입각한 相互依存論으로 해결하려는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기술이전문제는 한·일간의 심각한 갈등요인이지만 최근에는 한국이 일본보다 미국 기술을 選好·收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향후 한·일 경제관계는 한국의 대일수출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일 것이고, 기술이전도 日本一邊倒에서 미국 등 多邊化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경제교류도 1965년 2억4천만달러에서 1994년에는 백배가 넘게 성장함으로써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이해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過去清算問題에 대한 전망은 다음과 같다. 일본의 자민·사회·사키가케 연립여당이 1995년 6월 6일 오랜 진통끝에 합의하여 중의원에서 채택(6.10)된 전후 50년 不戰 國회결의안(「역사를 교훈 삼아 평화결의를 새로이 하는 결의」)은 한마디로 타협의 産物이었다. 결의안의 초안은 「일본국가는 과거 한시기 식민지 지배와 침략행위를 해 많은 국가, 특히 아시아국민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었다」고 명문화했으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적 행위는 구미의 열강도 했던 일이라고 客觀化했다. 최근 일본에서는 사회당까지 보수화되는 總體的 保守現狀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일본정부가 빠른 시일내에 인접국가들이 수용할 수 있는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보상과 반성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한·일관계를 변화시키고 갈등을 빚을 요인은 북·일수교, 일본의 군사현대화정책 그리고 신보수의자들의 등장이다.

최근 일본정계에는 「總保守化」현상이 확산되면서 사회당의 무라야마총리, 신진당의 오자와간사장 그리고 자민당의 하시모토총재 등 신보수주의자들의 세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들은 일본을 아·태지역의 강대국으로서 정치대국화를 지향하는 전략적 차원아래 역내 국가들과의 군사교류를 넓혀 透明性を 제고시키는 한편, 미·일 안전보장체제를 아시아각국으로 連繫시키는 다자간 안보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전략은 미국의 동북아 均衡者役割 범위내에서 추진될 것이므로, 북·일수교 요인(남북한 등거리외교)도 한·일간의 큰 마찰을 야기시키리라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북·일관계사안에 따라서 한·일관계는 「協力과 牽制」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적으로 향후 한·일관계는 냉전이후시대를 맞이하여 미·일관계 속에서 일본의 역할증대, 일본의 군사강국화, 북·일수교, 신보수주의자들의 등장 등 다양한 갈등요인으로 인하여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지만 국교단절 등의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향후 한·일관계는 급속한 변화없이 持續·維持될 것이다.

第V章 韓國의 對應方案

1. 基本方向

냉전시기의 한·일관계에서는 한반도의 안전은 일본의 안전에 緊要하다는 안전보장상의 명분이 정책상의 優先順位를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냉전체제의 붕괴에 따라 한반도가 갖는 안전보장상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며 미·일관계의 同伴者적 성격에로의 변화에 따라 일본의 관심은 한반도 뿐만이 아니라 전지구적 규모로 확대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경제 초강대국에 걸맞는 政治·軍事的 役割을 모색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협력아래 세계 및 아태지역에서의 안보문제에 대한 발언권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아시아지역 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지역에서도 PKO활동에 참가하였고, ODA공여의 확대를 수단으로 세계 도처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아시아지역의 주요국가인 일본을 상대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세계적 규모에서의 영향력있는 국가 일본을 상대로 해야하는 새로운 환경에 처해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한·일관계는 地域次元과 地球的次元에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먼저, 지역차원에서는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동북아지역의 질서 안정을 위해 급격한 勢力均衡이 파괴되지 않도록 양국은 적극적으로 협력, 대응하여야 한다. 그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同지역에의 개입을 계속 확보하는 것이 양국의 공통된 국가이익이 될 수 있다.

또한 한·일 양국은 중국과 북한 등 사회주의권 牽制, 러시아의 개혁정책을 지원하여 이들을 자유경제체제의 一員으로 編入시켜 지역안정에 일조하도록 공동보조를 맞출 수도 있다. 즉, 중국의 군사력 강화, 특히 남사군도 등에서의 해군력 강화는 한·일 양국의 해상운송로의 안전확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며 북한의 핵문제 및 경수로 공급문제 등은 양국에 다같이 심각히 중요한 안보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협력할 餘地가 많다.

한편, 지구적차원에서는 국제사회의 相互依存性이 더욱 심화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한·일 양국이 협력하여 공동의 이익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경우가 점차 증대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3국에 공동 진출한다든지, GATT, APEC, WTO 등의 국제기구에서 인접국으로써 공동보조를 맞출 수 있다든지, UN의 PKO활동 등에서 상호 협력하는 것 등이 가능하다. 더 나아가 지구의 환경보호, 과학기술의 발전, 빈국에의 원조 등에서도 양국은 폭넓게 협력할 수 있는 餘地가 많다. 따라서 양국은 하루빨리 감정적 대립에서 벗어나 보다 巨視的인 次元에서 양국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창조하여야 한다.

한·일관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인 한국의 대일무역적자는 단순한 경제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양국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30년동안에 한국의 무역적자는 무려 1,000억불을 초과하였다.⁶⁰⁾ 우선 한국은 무역불균형을 是正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설비투자의 증대, 불균형의 구조적 요인의 조정과 제거, 독자적 기술

60) 『中央日報』, 1995. 6. 21.

개발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과의 관계에서 시장원리에 입각해서 경제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최근에 일본정부는 엔 경제권을 기초로 하여 다자간 안보기구를 제안함으로써 동아시아 질서를 주도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주도를 牽制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전통적인 반일 국민감정 또는 일러간의 정치적 불화를 이용할 수도 있으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미국의 同지역에서의 영향력 유지를 誘導하는 것이다. 즉 지속적인 미국의 개입이 同지역의 안정을 위한 최선의 보장책인 것이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미·일관계의 양호한 지속이 우리의 안전과 번영의 보장책이 됨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기존의 한·미·일 협조체제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한·일관계는 결국 한·미·일 협력관계의 틀안에서 상당부분 기능하고 있으며, 특히, 미·일관계의 脈絡으로부터 파악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短期的 對應策

단기적 대응방안은 주요 외교안보 및 경제현안별로 제시하고자 한다.

가. 外交安保懸案

(1) 東北亞·韓半島 安定維持

동북아 한반도 안정유지(한·일 군사협력 교류와 다자주의 통한

지역안정 모색) 현안은 사안의 성격상 중·장기적 차원에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일 군사협력 교류의 단기적 대응책으로는 첫째, 현재와 미래의 북한 핵활동을 동결시키기 위한 韓·美·日 共助體制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둘째, 양국은 북한의 「노동 1호」 미사일의 사정권에 한국과 일본 관동지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대응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즉 한국과 일본이 북한을 미사일 수출통제기구(MTCR)에 가입시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스커트, 노동 1·2호 미사일의 수출금지가 이루어지도록 미국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여야 한다.⁶¹⁾

(2) 北·日修交

일본은 한반도에서 영향력 확대를 적극 모색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반도의 現狀維持를 선호하고 남북한 等距離 外交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의 남북한 등거리정책 추구로 인한 독자적인 對北韓接近을 牽制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은 일·북한수교 이전에는 일본과의 긴밀한 협의와 협력을 통해 일본의 대북접근을 남북대화재개와 連繫시켜 수교교섭의 완급을 조절해야 한다.

한편 일·북한수교 이후에는 정치·안보면에서 다음과 같은 대응

61) 최근 美국무부는 북한의교부장으로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미사일 수출 통제기구(MTCR)에 가입할 것과 더 이상 지대지 미사일을 수출하지 말라”고 국무장과 명의의 경고서한을 보냈다. 「中央日報」, 1995. 5. 10.

을 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수교후 예상되는 일본의 대북한 경제지원에 대비하여 한국은 일본과 긴밀한 협의 및 한·미·일 협조체제를 통해 일본의 원조가 북한의 改革·開放을 誘導하고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둘째, 일·북한수교 후의 일·북한 경제협력에 대하여도 과민한 경계보다는 일·북한의 경제협력을 이용한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 및 한국의 정치·경제적 實利確保 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일·북한 수교후 한반도에 있어서의 일본의 역할증대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일·중·러 3국간의 일정한 牽制와 均衡을 유지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제적인 측면의 대응과 관련하여, 한국은 한반도에서 일본의 압도적인 경제적 영향력과 독자적인 대북한 경제지원 가능성을 견제하기 위하여 한국경제의 對日依存度を 緩和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경제기술협력의 다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3) 日本의 유엔 常任理事國 進出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될 경우 한반도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검토를 먼저 시도할 필요가 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서 먼저 일본의 政治的 役割 증대 노력을 유엔내에서 시도케 하고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유엔체제하에 모색케 함으로써 금후 일본의 군사대국화 가능성을 牽制할 수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상임이사국

인 중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영학력 확대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은 동북아에 있어서 미·일·중·러 4강의 상임이사국화를 招來함으로써 유엔중심의 세계질서하에서 새로운 동북아질서 구축을 위한 다자간 노력을 증대시키게 될 것이다.⁶²⁾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이 아시아 인접제국과의 과거사문제 해결 등을 통하여 이들 제국의 이해와 지원을 전제로 할 경우,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긍정적 측면이 보다 浮刻될 것이다. 최근 미국은 世界的 同伴者關係 구축에 따른 役割分擔차원에서 일본과 「물품, 수송지원 협정」을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도 적용하는 등 일본의 유엔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보이고 있다.⁶³⁾ 따라서 일본이 유엔상임이사국의 地位를 획득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일본이 유엔상임이사국에 진출하되 拒否權을 갖지 않는 상임이사국 지위를 갖도록 하는데 외교력을 집중시켜야 한다.

62) 반면 부정적인 측면으로서는 유엔 안보체제하에서의 일본의 군사적 역할증대는 금후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위한 명분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즉 유엔 평화유지활동에의 참여를 위한 일본 헌법적 제약요인의 배제 등은 장래 일본이 군사대국화 가능성을 촉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은 한반도문제에 대한 일본의 개입 가능성을 증대시키게 될 것이다. 셋째,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은 지역내 상임이사국간의 경쟁관계를 심화시켜 지역정세의 불안정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63) 「朝日新聞」, 1995. 9. 1.

나. 經濟懸案

(1) 貿易逆潮

한·일간의 貿易不均衡을 개선할 수 있는 기본방안은 경제논리에 입각한 한국의 경쟁력 강화다. 그러나 한국은 임금상승 등에 의한 한국제품의 경쟁력 약화, 또한 중국 및 아세아국가들의 추격으로 對日수출이 감소하는 추세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은 일본시장에서의 판매노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한국기업은 철저한 품질관리, 납기준수, 바이어와의 신뢰관계 등을 지켜서 까다로운 일본시장과 소비자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한국정부는 까다로운 유통구조를 갖고 있는 일본에 대해 유통상 규제완화, 배타적 거래관행 등 구조개선의 是正을 요구하여야 한다.

최근 일본은 엔고, 무역흑자의 감축을 위해 이전과는 달리 대폭적으로 産業構造 調整을 진행시킬 것이다. 신규산업의 창출, 산업의 고부가치화, 成熟분야의 과감한 해외이전이 구조조정 의 큰 방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공조립산업의 量産型企業들의 전략은 한편으로는 합리화를 추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형태의 해외진출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생산의 확대는 물론 설비·부품의 현지조달 강화, R&D기능의 現地化, 현지기업들과의 협력 등 다양한 기능을 현지화하여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분야의 連繫를 구축하려고 할 것이다.

향후 한국정부나 기업들의 대응방안은 우선 일본기업들의 한국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일본기업들의 對한진출이 용이하게 여건(자금조달, 세제)을 재정비해야 한다. 한국으로의 誘致뿐만 아니라 역으로 일본진출이나 제3국에서 일본기업과의 협력 방안도 적극적으로 摸索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일본의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기업과 품목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선정된 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 필요가 있다.

(2) 産業技術移轉問題

최근 한국은 일본에 대해 하이테크 기술의 이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부메랑 현상을 우려하여 여전히 하이테크 기술의 이전에는 소극적이다.

향후 대응방안은 대기업들도 好景氣를 이유로 필요한 설비나 자재를 수입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업들간의 기술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戰略的인 기술提携, 외국기술자의 초빙에 의한 국산화의 추진 등 對일본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 過去清算問題

1965년 한·일 두나라 사이의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졌으나 그 후에도 끊임없이 계속된 갈등의 가장 중요한 근본원인은 과거역사에 대한 清算을 아직 매듭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앞으로 한일관계의 신뢰 구축에도 커다란 障礙要因으로 작용할 것이다.

지난 30년간의 한일관계는 '사죄없는 정상화'가 한일 두나라의

국민적 화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적 차원의 보상은 더 논의할 필요가 없으나, 국민적 의지를 담은 사죄는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과거청산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국국민의 요구 때문만이 아니라 일본 스스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다가오는 21세기 일본이 국제무대에서 명실상부한 지도적 위치를 확보하고 인류의 共同善을 위해 기여하려면 지난날에 있었던 과오를 진지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보편적 가치와 도덕을 갖춘 국가로 국제사회에서 인정 받아야만 한다. 이러한 과정 없이는 일본이 아무리 국제공헌을 강조해도 공허할 뿐만 아니라 주변국가의 의구심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過去清算問題 자체를 공식외교의 最優先 懸案으로 삼는 것은 외교적 실익이 크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일본의 보수적 정치가들이 과거 침략행위에 대한 옹호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 항의를 계속하여야 하며, 그러한 발언을 하지 말도록 促求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의 침략행위와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는 정부차원의 공식적이며, 공개적 행위가 있는 경우, 침략의 피해당사국들과 連帶하여 대응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정부가 앞장서기 보다는 학자, 민간운동가 등이 주도하고 정부는 이들을 협조, 후원하는 입장을 지킬 필요가 있다.

3. 中·長期的 對應策

가. 安保協力 : 東北亞·韓半島 安定維持

(1) 軍事協力 交流의 漸進的 擴大·強化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는 전통적으로 일본의 중대한 이익사항이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와 관련하여,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문제, 북한 정권의 급작스런 붕괴 등 한반도 有事時와 한반도 통일문제 등이 한·일 양국의 안보협력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안전보장상의 이익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동아시아의 안정적 균형, 세계시장으로의 접근 보장이라는 세가지 환경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한국의 이익은 일본의 이익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합치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우선 한·일 안보협력은 상호신뢰를 조성하는 안보대화과 교류로 시작하여 점차 냉전의 特殊한 관계로부터 벗어나 냉전후의 시대적 배경에 부응하는 새로운 안보협력 관계로 再定立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은 현재 헌법상 어느 나라와도 방위산업을 함께 하거나 방위물자를 수출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동맹 또한 맺을 수 없게 되어 있다. 미국만이 예외로 동맹을 맺고 있지만, 그것은 2차대전이 후 강제적으로 맺어진 동맹이다.

최첨단기술을 보유한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기술교류의 가능성

이 이루어질 때 한국의 방위산업 뿐만 아니라 민간산업에도 영향을 미쳐 상호 上昇效果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기술을 이전받는데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국가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만큼 군사기술교류의 협의 및 진행 자체를 매우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일 군사협력이 신뢰구축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으나 첫째, 자위대를 군대로서 인정하는 契機를 부여하여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誘導하게 할 수 있고, 둘째, 동아시아의 군사적 대결을 유발할 수도 있다. 즉 한·일이 군사협력을 공개화하고 공동군사훈련을 실시할 경우 중국은 경계적인 태세에 돌입할 것이고, 북한도 당연히 비판적 입장을 취할 것이다.

長期的인 측면에서 한·일간 안보협력은 군비통제차원에서 군사적인 신뢰구축, 세계평화와 지역안정을 위한 공동관심사에 대한 협력체제 수립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多者主義 通한 地域安定 摸索

일본의 미야자와 정권은 동아시아에서의 다자간 안보협의체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유럽에서의 안보협력회의(CSCE)의 완성은 아시아 지역에서도 同기구와 유사한 성격의 다자간 협의체의 출현이 가능하다는 기대감을 高潮시키고 있다. 한편 러시아의 경우에도 同구상에 적극적이어서 옐친 대통령은 방한시 同구상을 피력한 바 있다. 또한 최근 들어 同구상에 대한 미국의 태도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미국의 참가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을 충분히 고려하여 우리는 먼저 同구상

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介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유럽에서도 결국 미국이 적극 참가하여 그러한 구상이 실현 가능했음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즉 한국은 미국이 참가하지 않는 안보협력기구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강조해야 하며, 또한 중국, 러시아 등 지역강국들을 참가시킴으로써 일본의 獨走를 牽制하여야 한다. 同기구의 창설은 일본 군사를 제도적인 장치안에 구속할 수 있다는 점과 지역국가들의 신뢰구축을 통해 지역정세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진이 바람직하다.

한국이 동북아 6개국 안보협의회의를 통해 기대했던 목표들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대미관계는 물론 중국, 러시아, 일본과의 양자관계 증진과 한·미, 韓·日 安保協助體制의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다자간 대화는 반드시 다자간의 협상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양자관계를 통해서 공통시각 및 이익 등을 圖謀한다면 그 결과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현정부의 통일방안단계에 따라 정책을 추진한다면, 남북연합의 단계에 도달하기전 현행 휴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다자간 안보대화의 채널속에서 북한의 일본 및 미국과의 관계개선 속도와 평화체제의 전환문제를 連繫시키는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한이 다자간 안보대화에 참가할 경우 남북 양자간에 다룰 수 있는 문제와 다자간 틀 속에서 협의할 문제를 구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事前準備가 필요하다.

넷째, 다자간 안보대화를 mini-CSCE형의 안보협력체 수준으로

발전시키려면 군비통제 및 신뢰구축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도록 미국은 물론 러시아, 중국 및 일본의 핵정책이나 미사일 수출정책, 각국의 재래식 무기수출정책, 그리고 전략무기 체계개발에 대한 우리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나. 經濟協力

(1) 兩者間の 經濟協力

한·일 양국간의 경제관계가 바람직스러운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완전한 水平分業을 모색하는 것이다. 즉 양국이 분야별로 각기 장점을 살려 特化한 수평분업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평분업하에서만 산업공동화를 막을 수 있다.

둘째방안은 相互補完을 바탕으로 하는 공조체제의 확립이다. 한·일 양국은 이러한 공조체제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으로 대표되는 경제블럭화현상에 대응하여야 한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양국의 정치·경제인들이 상호신뢰하는 인식을 공유할 때 수평분업이나 상호보완성의 共助體制가 견고히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2) 多者主義 通한 地域經濟 協力

域内の 다자간 경제협력은 아태지역 차원에서의 아태경제협력체(APEC) 및 동북아시아 차원에서의 동북아경제협력 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동북아시아의 다자간 협력은 국제연합개발기구(UNDP)가 주관하는 두만강지역개발(TRADP)의 발전으로 인하

여 세계적 注目を 받고 있다. 또한 동북아지역은 중국의 경제성장 잠재력과 일본의 경제력 및 한국의 經濟的 力動性으로 인하여 성장의 중심으로 浮上하고 있다.

동북아지역 국가들간 경제관계의 특징은 垂直的 分業을 위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역내국가들간 수직적 분업의 심화는 후진국과 선진국간 문제를 대두시켜 域內 경제관계를 대립적 관계로 固着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역내에서의 패권주의적 역할을 반대하는 역내국가들로서는 일본을 頂点으로 하고 여타 국가들이 이를 따르는 안행모형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 경제협력은 역내의 수직적 분업체계를 점진적으로 水平的 分業體系로 전환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바, 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는 다자간 협의를 통한 역내국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동북아지역 경제협력 구상과 관련, 한반도의 서해를 중심으로 한 環黃海圈과 한반도의 동해를 중심으로 한 環東海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⁶⁴⁾ 일본이 제창하고 있는 環日本해 經濟圈은 한국, 일본, 러시아, 중국, 그리고 북한을 주요 구성국으로 하며 이들 국가들의 동해에 面한 지역을 주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다. 일본측 구상의 특징은 동북아 경제권 구상에 있어서 광범위한 국가를 단위로 하기 보다는 환일본해 경제권과 같이 연해지역간의 국제교류를 중심으로 하는 地域開發計劃을 통한 접근을

64) Robert A. Scalapino, "The Quest for a New World Order and Northeast Asia," May 25~26, 1995, Swies Grand Hotel, Seoul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pp. 1~15.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은 자본 및 기술면에서 동북아지역에서 주도적 입장에 있으나 일본의 세계적 역할과 자본의 流動性 한계를 고려하여 환일본해 경제권이 開放的이어야 하며 배타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은 동해를 중심으로 한 경제권의 활성화를 提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대응책은 역내 국가와의 경제협력이 환황해권과 환동해권의 발전을 균형있게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시켜야 한다.

아태경제협력체(APEC)와 관련 일본은 미국과의 협력하에 세계경제를 주도해 나가면서 자유무역주의를 확산해 나가야 할 입장에 있으므로 아시아와 북미지역이 연대해 아태지역의 무역자유화를 지원하는 방안이 優先的 代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대외경제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를 최우선과제로 삼고 지역의 배타적 경제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미국·일본과 협력하여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한국은 두만강지역 개발계획이 향후 약 20년간을 사업기간으로 設定·計劃하고 있으므로 관련국 및 특히 자본과 기술을 보유한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조정자 역할을 하여야 한다. 요컨대 한국은 아태지역 차원의 광역적 지역협력과 동북아지역 차원의 小地域的 경제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폐쇄적 형태가 아닌 開放的 地域主義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선도하여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1. 단행본

- 이승훈. “기술협력의 일반상황.” 안병직編. 「일본의 산업기술」 서울: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1991.
- 한국은행 조사1부. “最近의 對日貿易赤字要因과 向後 課題.” 조사연구자료 92-9. 1992. 5.
- 松本厚治. 「日韓經濟摩擦: 韓國エユノミストとの論争」. 東京: 東洋經濟新報社, 1986.
- 室山義正. 「日·美 安保體制」(上). 東京: 有斐閣, 1992.
- 奥宮正式. 「アナリオを頼り出來にるか」. 東京: PHP研究所, 1995.
- 日本外務省編. 「外交青書: わが外交の近況」. 1981년판.
- 日本外務省編. 「外交青書: わが外交の近況」. 1969년판.
- Cronin, Patrick M. and Green, Michael J. *Redefining the U.S.-Japan Alliance: Tokyo's National Defense Program*. Washington,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1994.
- Johnson, Chalmers. *Japan Who Governs?: The Rise of the Developmental State*. N.Y.: W.W.Norton & Co. 1995.
- Military Balance 1992~1993*
- Richard, P. Cronin, *Japan's New Era of Coalition Governance: Implications for U.S. Interests and Policy*. Washington

- D.C.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Defense Division, 1995.
- Robert, Triffin. *Gold and Dollar Crisis: The Future of Convertibility*. New Haven, Conn.: Yale University Press, 1961.
- Sasae, Kenichiro. *Rethinking Japan-U.S. Relations*. London: IISS/Brassey's, 1994.
- U.S. Department of Defense. *Farce Structure Excerpts. Bottom-Up Review*(Sep. 1, 1993).

2. 논문

- 김영춘. “수교협정이후의 한·일관계.” 「국제정세」. 1990. 7.
- 한영구. “한국 대일 외교의 방향과 과제.” 「국제정세」. 2월 5호, 1990년 5월.
- グレン・フクミマ, 本間長世, 五十*武士. “クリントン 政權2年目の課題と日美關係.” 「國際問題」. 1994年 2月(No.407).
- 松本厚治. “對日貿易逆調は日本の責任ではない.” 「現代코리아」. 1992년 1월.
- 田中 明, 佐藤勝己. “謝罪するほど悪くなる日韓關係.” 「文藝春秋」. 1992년 3월
- 佐蘇行雄. “求めらある日本の發想轉換.” 「外交フォーラム」. 1993年 1月號.
- 洪林正夫·山田敬男·大久保賢. “憲法と平和を考える.” 동경: 學習の友社, 1995.

- Curtis, Gerald L. "Meeting the Challenge of Japan in Asia." in Gerald L. Curtis (ed.). *The United States. Japan and Asia*. N.Y.: W.W.Norton & Co., 1994.
- Johnson, Chalmers. "Where's Chinton on Asia?" *New York Times*. Feb. 8, 1993.
- Johnson, Chalmers and Kecben, E. B. "The Pentagon's Ossified Strategy." *Foreign Affairs*. Vol. 74. No. 4.
- Kanayama, Hisahiro. "The Future Import of Energy Problems in China." *IIPS Policy Paper*. 124E (June 1994).
- Nye, Joseph. "Coping with Japan." *Foreign Policy* 89 (Winter 1992~93).
- Oksenberg, Michel. "China and the Japanese-American Alliance." in Gerald L. Curtis (ed.). *The United States. Japan. And Asia*. N.Y.: W.W. Norton & Co., 1994.
- Satoh, Yukio. "Asian Pacific Process for Stability and Security." *the 5th Asia-Pacific Roundtable: Confidence building and Conflict Reduction in the Pacific*(Kuala Lumpur: June 10~14, 1991).
- Hisayoshi Ina. "A New Multiateral Approach for the Pacific: Beyond the Bilateral Security Network." The Johns Hopkins Foreign Policy Institute papers, 1993.
- Scalapino, Robert A. "The Quest for a New World Order and Northeast Asia."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May 25~26, 1995, Swiss Grand Hotel, Seoul.

3. 기 타

「東亞日報」.

「世界日報」.

「朝鮮日報」.

「中央日報」.

「讀賣新聞」.

「每日新聞」.

「産經新聞」.

「朝日新聞」.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빈 면

● 發刊資料目錄 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북한의 權力構造와 金日成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 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 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 94-04 金日成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 94-05 統一文化와 民族共同體 建設
- 94-06 南北韓關係 現況 및 95年 情勢展望
- 95-01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摸索

95-02 남북화해·협력의 실천지표:「민족발전공동계획」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對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
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의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
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
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
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
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的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화와 東北亞秩序：1990年代 東北亞 秩序·豫測(Ⅳ)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Ⅲ)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
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分析을
中心으로
- 93-21 北韓의 에너지 供給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 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1945~1993)
- 94-01 북한 關稅부패 연구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6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7 金正日 리더십 研究
- 94-08 北韓 民族主義 研究
- 94-09 김정일의 軍事權力基盤
-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強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 94-12 統一韓國의 政黨制度와 選舉制度
- 94-13 南北聯合 形成 및 運營 方案研究
- 94-14 金正日體制의 對南政策 展望
- 84-15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分析
- 94-16 北韓 指導部の 情勢認識 變化와 政策展望
- 94-17 北韓의 對外經濟 開放政策 現況과 展望
- 94-18 統一韓國의 對外經濟協力 方向: 亞·太地域 多者間協力
關聯
- 94-19 1994年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4-20 「조선전사」解題
- 94-21 1995年 NPT延長會議과 韓國의 對策
- 94-23 北韓 住民들의 價値意識 變化: 蘇聯 및 東歐와의 비교연구
- 94-24 韓國 民族主義 研究
- 94-26 中國과 北韓의 政治體制 比較研究: 黨·軍關係를 中心으로

- 94-27 統一韓國의 登場에 따른 東北亞地域 安保構造 變化 對
應策
- 94-28 남북한 문화정책 비교 연구
- 94-29 南北韓 協商行態 比較研究
- 94-30 南北韓 特殊關係의 法的 性格과 運營方案
- 94-31 統一韓國의 權力構造
- 94-32 統一韓國의 社會福祉政策
- 94-33 統一韓國의 政治理念
- 94-34 統一以後 國民統合 方案 研究
- 94-35 統一韓國의 經濟體制
- 94-36 國際機構를 통한 南北韓 交流·協力增大 方案 研究
- 95-01 러·北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02 金正日 政權의 人權政策 變化展望
- 95-03 北韓 知識人政策의 變化
- 95-04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 95-05 金正日 政權의 權力엘리트 研究
- 95-07 서독의 분단질서관리 외교정책 연구
- 95-08 北韓의 對美國政策 變化研究
- 95-09 韓·日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진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 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 韓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를 계기로 본 亞·太地域 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北韓 核問題와 美·北 關係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 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核問題에 대한 中國의 立場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9期 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러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 94-12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4~6)
- 94-15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 94-16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7~9)
- 94-17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과 對中政策 方向
- 94-18美國의 中間選舉 以後 對韓半島政策 變化展望
- 94-19北韓의 變화와 金正日 政權의 將來
- 94-20核 經協連繫 緩和措置와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
- 95-01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情勢 및 韓半島政策 展望
- 95-02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5. 1~3)
- 95-03中國의 政局展望: 第8期 全人大 3次會議 結果를 中心으로
- 95-04金正日 承繼體制 鞏固化 動向
- 95-05北韓의 食糧支援 要請背景과 對北韓 食糧支援 方案
- 95-06金日成 死後 1年: 북한정세의 동향과 전망
- 95-07「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廢棄의 意味와 評價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 ~ 1993. 9. 30)
-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 ~ 1993. 12. 31)
-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 ~ 1994. 3. 31)
-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 ~ 1994. 6. 30)
-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 ~ 1994. 9. 30)
- 94-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0. 1 ~ 1994. 12. 31)
- 95-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 1 ~ 1995. 3. 31)
- 95-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4. 1 ~ 1995. 6. 30)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 94-0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4~1995

〈論叢〉

-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8)

統一研究論叢 第3卷 2號(1994. 1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4)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
AL UNIFICATION(1993)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
AL UNIFICATION(1994)

〈資料〉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93-01 藏書目錄:單行本·研究報告書

93-02 藏書目錄:特殊資料

-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 94-02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中)
- 94-03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下)

〈統一文化 시리즈〉

- 94-01 統一文化研究(上)
- 94-02 統一文化研究(下)

韓·日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研究報告書 95-09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2-9252, FAX : 232-5341
印刷處 陽東文化社 전화 : 266-0892
印刷日 1995年 9月 日
發行日 1995年 9月 日
